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5. 1

농림축산식품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과제 선정)** ‘24년 역점 추진한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등**과 **연계**한 **관리과제 48개 선정**

○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와 연계한 핵심 정책·사업을 포함한 관리과제 선정을 통해 농식품부 정책성과 창출 및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강화

□ **(내외부 평가)** 실·국장급 **내부 난이도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정성・객관성 확보**하고, 우리부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제고**

□ **(평가 결과) 통합성과평가**(성과급 등)와 **연계**하여 **정책개선, 책임성 제고**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성과지표 심층검토 (~11.8)	⇒	자료 작성 (~11.22) * 설명자료 (~10.25)	⇒	1차 평가 (~12.20)	⇒	이의 제기 (~'25.1.3)	⇒	난이도 평가 ('25.1월)	⇒	2차평가 (~'25.1.10)	⇒	난이도 반영·점수산출 (~'25.1.22)	⇒	확정·제출 ('25.1.31)
(KREI/부서)		(담당부서)		(평가위원)		(담당부서)		(내부평가)		(평가위원)		(혁신행정)		(국조실)

□ 평가방법

❖ **과제담당 부서에서 작성·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해서 자체평가위원이 평가지표(정량·정성)에 의한 서면 · 집합평가 실시**

○ **(내부)** 소관 과제별 국장급 평가 → 실장급 평가 → 조정회의(차관)

○ **(외부)** 1차 서면평가 및 2차 집합평가(5개 분과 구성, 3일간 진행)

* 정량지표 사전 검토(KREI), 1차 평가결과 소명기회 제공 등으로 평가 신뢰도 제고

○ **(최종)** 과제 평가 결과에 난이도 평가 등급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최종 결과(점수, 등급)를 산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4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내 포함된 48개 관리과제

< 농식품부 자체평가 대상 >

국제		농촌		동물복지		농식품혁신		농업		식품		방역		식량		축산		유통	
계	5	계	6	계	4	계	5	계	6	계	5	계	3	계	5	계	4	계	5
국제협력	1	농촌정책	1	동물복지	1	스마트농업	1	농업경영	1	푸드테크	1	방역	1	식량정책	1	축산정책	1	유통정책	1
농업통상	1	농촌계획	1	탄소중립	1	농산업수출진흥	1	농지	1	식품외식	1	구제역	1	식량산업	1	축산경영	1	식생활소비	1
검역정책	1	농촌사회	1	반려산업	1	첨단기자재종자	1	공익직불	1	수출진흥	1	AI	1	농업기반	1	축산환경	1	원예산업	1
자유무역협정	1	농촌경제	1	개식용종식	1	과학기술	1	농업금융	1	그린바이오	1			농업시설	1	축산유통	1	원예경영	1
K-라이스벨트	1	농촌여성	1			친환경	1	재해보험	1	식품클러스터	1			전략작물	1			농축산위생	1
		농촌재생지원	1			빅데이터	-	청년농	1										

○ 평가지표

< ’23년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1. 계획 수립의 충실성	10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8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5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 달성도	25
	3-2. 정책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5
4. 환류 노력도	4-1. 평가 결과 환류	7
5. 가·감점	5-1. 20대 중점 국정과제	+1
	5-2. 자료제출 및 입력의 적시성	-1

➡

< ’24년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1. 계획 수립의 충실성	10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8	
	2-2. 관련기관·정책간의 협업 노력도	**7**	**’24년 지침 반영**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 달성도	25	
	3-2. 정책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5	
4. 환류 노력도	**4-1. 정책 환류 노력도**	**5**	**항목간 점수 조정**
5. 가·감점	**5-1. 핵심민생과제**	**+1**	**’24년 지침 반영**
	5-2. 부서간 협업과제 추진	**+0.7**	**〃**
	5-3. 기관장 가점	**+3**	**과제 난이도 반영**
	5-4. 기한 준수 및 추진실적 이행률 등 확인	-2	

2. 평가결과

(1) 총 평

❖ 글로벌 복합위기, 인구·기후 위기에도 **농정의 "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관리과제의 성과가 우수**

- 스마트 APC 확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액 초과 달성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생산자·소비자 편익 증대 기대
-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 5천명 선발 등 농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물류비 폐지 등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역대급 농식품 수출 성과 창출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일자리·돌봄·의료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살고싶은 농촌 환경 조성 및 개식용종식 추진 등 동물보호 문화 확산

□ '24년도 총 58개 과(팀) 중 48개 과(팀)의 **48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2개(4.2%), 우수 7개(14.6%), 다소 우수 8개(16.7%), 보통 16개(33.3%), 다소 미흡 7개(14.6%), 미흡 6개(12.5%), 부진 2개(4.2%)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AI방역관리 강화,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 농업재해 지원 강화 등 9개 과제(상위 19%)이며,

ㅇ "미흡 이하" 과제는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여성농업인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등 8개 과제(하위 17%)인 것으로 평가됨

□ 총 48개 관리과제의 **13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1.1%**로,

ㅇ 123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최근 3년간 성과목표 달성률>

구분	2022	2023	2024
성과목표 달성률	94.5%	99.8%	91.1%
총 성과지표 개수	128개	128개	135개
총 성과관리 과제수	43개	44개	48개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면적·생산량 감소, 농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직불금 지급 감소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인력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 특성을 감안할 때,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일부 목표 미달성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전략작물직불 참여 면적(만ha)	14	13.7	97.9%	- 파종기 잦은 강우,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전략작물 재배를 중도 포기한 농가가 일부 발생하여 신청면적 대비 이행률 감소
밀 식량자급률(%)	2.5	1.4	56.0%	- 맥류 출수·개화 시기인 4월, 잦은 강우와 기온 상승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붉은곰팡이병 다(多) 발생*으로 밀 생산량이 전년 대비 27.9%(잠정) 감소하여 식량자급률이 하락 * 최근 10년 중 발병률이 최대로, 전년 대비 평균 5.4배 증가
'24년 가루쌀 정부 매입량(천톤)	50	46	92.0%	- 9월중순까지 풍년이 예상되었으나 9월말 이상 고온 현상으로 수발아 피해와 등숙 저하로 생산량 저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만명)	129.5	128.4	99.2%	- 비대면 신청 서비스 확대 등 신청 편의, 사업 운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였음에도 농가인구 감소 및 자격요건 검증 강화에 따라 지급 대상자 감소
농업 공적보조금의 농가소득 기여율(%)	33.3	32	96.1%	- '농가소득은 외부변수(농산물 가격, 국내외 경기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24년 조사된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10.1%)하여 - 결과적으로 공적보조금(직불금 등)이 늘어났음에도 상대적으로 기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 발생
축산물 유통 기반조성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	법령 제정	국회 제출	거의 달성	- '24.7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 및 쟁점 법안 등 현안 우선 처리로 인해 일정 지연
전후방산업 수출실적(백만불)	3,091	3,012	97.4%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 물류여건 악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농산업분야 수출액 감소 - 특히, 스마트팜의 경우 '23년 대형 수주계약(118백만불)의 역기저 효과로 수주 총액이 대폭 감소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전체경지면적대비, %)	30	25	83.3%	- 친환경농업은 관행 대비 노동력 투입이 많고, 기상변화 등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후위기, 병해충 발생,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응하기 어려운 대내외 변수로 인해 인증 면적 감소
중·대가축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감소율(%)	30	25	83.3%	- 중·대가축 제1종 전염병 발생은 '23년 총 128건(구제역 11건, ASF 10, 럼피스킨 107)에 비해 '24년 총 34건(구제역 비발생, ASF 11, 럼피스킨 23)으로, - 발생 건수는 크게 감소하여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효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지역과 농가단위 질병 재발로 목표치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함
농촌 정주 만족도	95.3	87.3	91.6%	- 도시 대비 농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 정주기반 만족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되어 개선되고 있으며, 보건복지 만족도 격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 교육문화 및 경제일자리 격차 증가로 인하여 목표 대비 만족도 달성이 저조

(2) 주요성과

□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 **9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물류비 폐지, 중동 사태, 환율 변동 등 부정적 여건에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여 우수한 성과 창출

- **'24년 농식품 수출액은 99.8억불로 전년 대비 9.0% 증가**

* 국가 전체: ('22) 6,836억불 → ('23) 6,322 (△7.5%) → **('24) 6,838 (8.2%↑)**
* K-Food+ : ('22) 118.3억불 → ('23) 122.8 (3.8%↑) → **('24) 130.3 (6.1%↑)**
* 농식품 : ('22) 88.9억불 → ('23) 91.6 (3.0%↑) → **('24) 99.8 (9.0%↑)**

⇒ **(달성원인)** 중동·중남미·인도 등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고, **범부처 협의체 신설 및 전략품목 중심 지원****을 강화하여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

* 농식품 수출 시장: ('23) 199개국 → ('24) 207
** 10대 전략품목 중 6개(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포도) 최대 실적 달성

○ **(AI 방역관리 강화)** 선제적 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 피해**를 최근 **15년간 두 번째로 적은 32건으로 최소화**하여 축산물 수급 안정 기여

- 산란계 살처분 최소화 및 안정적 계란 공급으로 **계란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며, **육계 발생 감소**로 **닭고기 가격****은 안정적 유지

* 소비자가격(30구) : ('22.12.~'23.3월) 6,476원 → **('23.12.~'24.3월) 6,311원(2.5%↓)**
** 소비자가격(1~3월, 원/kg) : ('22) 5,520 → ('23) 5,908 → **('24) 5,758(2.5%↓)**

⇒ **(달성원인) 3중 방역체계***를 기본으로 방역주체별 **자율 책임방역 강화**,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밀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

* ①철새 예찰→②농장유입 차단→③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 '08년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즌 중 '17/'18년(22건) 제외 시 가장 작은 AI 발생건수(32건) 기록

○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 국내인력 중개** 및 계절근로 등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소규모 **농가 경영부담 완화**

- 역대 최대규모의 외국인력(계절근로+고용허가)을 공급*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 확대**를 통해 국내 농업인력의 고용기반도 함께 유지

* ('20) 1,388명 → ('21) 2,397 → ('22) 22,200 → ('23) 40,961 → ('24) 58,896
** ('23) 농촌인력중개센터 170개소, 연인원 1,150천명 → ('24) 189개소, 1,543천명

⇒ **(달성원인) 농번기** 인력수급 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력 도입 확대

* 농번기 인력 수급 특별대책반 운영(4~6월, 8~10월)
** 농어업 인력 TF 설치, 운영('24.4월~)

○ **(농업재해 지원 강화)** 정책보험 **보장범위·수준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농가 재해 대응력** 제고 및 **농업인 경영 안전망** 역할 강화

- 재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7개→9, +보리·옥수수)

⇒ **(달성원인)** 농업정책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사 등 협력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 추진. 신규 품목 도입과 같은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全과정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소비자 편익 증진**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4년 거래액 **6,737억원을 달성**하며 기존 유통경로 대비 **농가 수취가격 3.5% 증가, 유통비용은 7.4% 절감**

⇒ **(달성원인)**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발굴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총 4회)** 추진

* 산지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선정시 가산, 물류비 지원 등

** ❶ 가공농산물 품목 확대(3.27), ❷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50억원 → 20) 및 수산물 품목 확대(5.22), ❸ 개인사업자 거래 허용(6.27), ❹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 도입(11.5)

(3) 개선·보완 사항

□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등 **8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성과지표 난이도 제고 필요

- 성과지표 대다수가 대표성은 있으나 예산 투입에 비례하는 산출지표*의 성격이 강해 향후 적극적 목표치를 담은 결과지표 검토 필요

* 침수피해방지율(%), 수리시설개보수율(%), 수질개선사업 추진율(%) 등

○ **(여성농업인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보완 필요

- 성과지표, 월별 이행계획 등이 상위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필요

○ **(전략작물직불제 안착 및 국산 밀·콩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교육, 농가 재해피해 대책 등 전략작물의 안정적 재배 방안 마련

- (전략작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전략작물 재배 포기 방지를 위해 재해 관련 구제방안 마련,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추진 필요

- (밀) 이상 기후 조건에서 생산량 감소 방지 기술개발 및 농가 교육 필요

* 맥류 출수·개화 시기인 4월, 잦은 강우와 기온 상승으로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전년 대비 평균 4.5배 증가하여 밀 생산량 감소 및 자급률 하락(최근 10년 중 발생률 최대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Ⅰ-1-1 쌀 수급안정	우수
Ⅰ-1-2 전략작물직불제 안착 및 국산 밀·콩 산업 육성	미흡
Ⅰ-1-3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관리 효율화	다소 미흡
Ⅰ-1-4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부진
Ⅰ-1-5 가루쌀 산업 활성화	보통
Ⅰ-2-1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	우수
Ⅰ-2-2 농업직불금 단계적 확대	보통
Ⅰ-2-3 농업재해 지원 강화	우수
Ⅰ-3-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우수
Ⅰ-3-2 농산물 수급안정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화	다소 우수
Ⅰ-3-3 과수·과채 수급안정 및 원예산업경쟁력 강화	보통
Ⅰ-3-4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 축산 확산	보통
Ⅰ-3-5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쟁력 강화	보통
Ⅰ-3-6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구조개선	다소 미흡
Ⅰ-4-1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농산물 소비 확대	보통
Ⅰ-4-2 농축산물 안전 및 원산지 관리	미흡
Ⅰ-5-1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다소 미흡
Ⅰ-5-2 농업통상 및 국제기구 대응 강화	보통
Ⅰ-5-3 농축산물 수출 검역장벽 해소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 기여	우수
Ⅰ-5-4 전략적인 FTA 협상 대응	미흡
Ⅰ-5-5 K-라이스벨트 실질적 성과 창출	보통
Ⅱ-1-1 청년 후계농 육성 확대	미흡
Ⅱ-1-2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 및 농지제도 개편	우수
Ⅱ-2-1 스마트 농업 확산 및 벤처창업기업 육성	다소 우수
Ⅱ-2-2 농기자재종자 산업 육성	미흡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Ⅱ-2-3 농식품 혁신 R&D 추진	보통
Ⅱ-3-1 미래식품산업 육성 및 활력 제고	다소 우수
Ⅱ-3-2 한식 및 외식산업 진흥	다소 우수
Ⅱ-3-3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매우 우수
Ⅱ-3-4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다소 우수
Ⅱ-3-5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다소 미흡
Ⅱ-3-6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보통
Ⅱ-4-1 친환경 농업 육성	보통
Ⅱ-4-2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다소 우수
Ⅱ-4-3 농업·농촌 탄소중립·기후대응·에너지 전환 역량강화	우수
Ⅱ-5-1 방역체계 고도화 및 민관 협업 강화	보통
Ⅱ-5-2 중·대가축 방역관리 강화	미흡
Ⅱ-5-3 AI 방역관리 강화	매우 우수
Ⅲ-1-1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보통
Ⅲ-1-2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지원체계 구축	다소 미흡
Ⅲ-1-3 농촌 정주여건 개선	보통
Ⅲ-2-1 농촌 사회 서비스 활성화	다소 우수
Ⅲ-2-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부진
Ⅲ-3-1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보통
Ⅲ-3-2 농협 제도개선 및 농식품 투자자금 지원강화	다소 미흡
Ⅲ-4-1 동물복지 제도·인프라 확충 및 동물복지 인식 제고	다소 미흡
Ⅲ-4-2 반려산업 육성 및 의료체계, 영업 개선	다소 우수
Ⅲ-4-3 개식용종식 이행	보통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1-1	쌀 수급안정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제적 수급정책 전환 등을 골자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소비량 감소폭 둔화 등 성과**

○ 정부관리양곡 재고의 효율적인 운용, 쌀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수요 창출 방안 등 효율적인 대책**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현장에서는 여전히 쌀 선호 현상이 강해 수급안정에 불안요소로 작용하므로 **일관성 있고,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추진 필요*

* 정부의 지속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24년 쌀값하락에 따른 시장격리 지속

○ 국내 쌀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나 지속 감소추세로, **쌀 소비 확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근본대책)** 쌀 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24.12.12), '29년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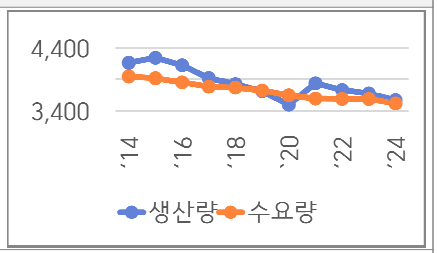
❖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개요

▶**(수립목적)** 만성적 **공급과잉*** **해소**,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체계** 개편

* 소비는 가파르게 감소**, 벼 재배면적은 완만히 감소

**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지속, '25년부터 총 인구 감소세 전환

▶**(주요내용)**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품질 고급화, 신규수요 창출, 유통 효율화 등



< 연도별 생산, 소비량 변화 추이 >

○ **(소비지표)** 구조개혁 대책 중 "新 수요 창출" 4대 과제*를 기반으로 쌀 **소비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 발굴·추진**

* ①식품기업 민간 신곡 사용 촉진, ②전통주 산업 육성기반 마련, ③쌀 가공식품·밥쌀 수출 확대, ④쌀 가치확산 등('24년에도 "쌀 가공식품 수출액" 지표는 포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적정생산, 수급관리, 양곡관리법 개정 등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추진계획 적절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적정 제고 불일치율 등은 과잉된 쌀 제고 효율적 관리 및 쌀 소비 성과를 드러내는 지표로 대표성이 있으나, - 쌀 소비 확대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추가 필요 ㅇ 쌀 수급 예·관측 T/F 구성, 타작물 전환 추진단 등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소비 감소 완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24년 시장 격리 시행 불가피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벼 재배면적을 2년 연속 감축하였고,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 0.5% 내외로 완화, 쌀 가공산업 및 수출을 확대하는 등 성과 도출 ㅇ 특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쌀 소비도 촉진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국감 지적사항, 언론 등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행하였음 ㅇ 인공위성 및 AI 등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확한 생산량 예측을 통한 수급불안 요인 해소 필요

1-1-2	전략작물직불제 안착 및 국산 밀·콩 산업 육성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략직불)** 전략작물직불제도를 확대(대상품목 확대, 지급단가 인상 등)하여 타작물 재배 전환을 촉진하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 지원 확대

- **(품목 확대)** 식용 옥수수* 및 팥·녹두를 포함한 두류로 대상 품목 확대

  * (신규 품목) 식용 옥수수 4천ha, 100만원/ha

- **(단가 인상)** 두류·가루쌀 지급 단가를 100만원/ha → 200만원/ha 상향 조정

○ **(전문 생산단지 육성)** 밀·콩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 **(밀)** 교육·컨설팅 제공, 시설·장비 지원*, 보급종 구입비 전년 대비 25% 확대**, 품질관리기준 개편

  * 전년 대비 밀 전용 장비(범용콤바인, 세조파파종기, 건조기) 지원 40% 확대

  ** 보급종 구입비 지원 : ('22) 1,210백만원 → ('23) 1,536 → ('24) 1,920

- **(콩)** 전문생산단지에 교육·컨설팅 및 현장기술지원*, 콩 종합처리장 개소수 전년 대비 17%(3개소) 확대**

  * 여름철 병해충 방제 및 사후관리 등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 추진단 운영

  ** 종합처리장(누계): ('23) 19개소 → ('24) 23 → ('25 목표) 26

○ **(공공비축제 개선)** 비축목표 및 방출 계획 개편으로 밀·콩 수급 안정 및 농가 판로 걱정 해소

- **(밀)** 단백질 최저함량만 고려한 기존 방식에서 용도별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도입하여 매입

  * 용도별(제면·제빵) 구분하고 세분화된 품질인자(단백질·회분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구분

- **(콩)** 지역 물량 안배, 논콩은 농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 시중가격으로 매입하는 품종구분매입 제도* 등으로 약정 목표물량 달성

  * 정부지원 논콩 전문생산단지 참여 농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 농가의 일부 물량에 대해 품종구분(대원콩, 대풍2호, 선풍, 대찬) 매입하여 KAMIS 상품 평균 가격 반영

○ **(인식 제고 및 홍보)** 제분·매입비 지원, 급식·가공업체 등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한 민간 수요 확대 및 제품 생산·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 **(밀)** 국산밀 제분비(톤당 20만원) 지원으로 수입밀과의 가격차 해소, 국산 밀 사용업체 19개소 신제품 79건 개발 지원

- **(콩)** 국산 두류 신수요 창출 및 소비 다양화를 위한 러쉬코리아 상생협약(MOU) 체결, 국산 콩 사용업체 10개소 신제품 15건 개발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략직불)** 파종기 잦은 강우,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전략작물 재배를 중도 포기한 농가가 일부 발생하여 신청면적 대비 이행률 감소

○ **(밀)** 맥류 출수·개화 시기인 4월, 잦은 강우와 기온 상승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붉은곰팡이병 다(多) 발생*으로 밀 생산량 감소 및 자급률 하락

* 최근 10년 중 발병률이 최대로, 전년 대비 평균 5.4배 증가

○ **(콩)** 농가 개인의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한 융자 미실행에 따른 계약재배 계획물량 미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략직불)**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전략작물 재배 포기 방지를 위해 재해 관련 구제방안 마련,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추진 필요

○ **(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조건에서 생산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농가교육 등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계획수립의 충실성 - 밀과 콩의 경우 수입곡물과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 수요(소비기반 확충) 측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필요 - 계약재배 물량으로 곡물가격 상승 충격완화 계측량이 설정지표로 들어가야 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 20개의 추진계획들이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확인 ㅇ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 농진청 외에도 타부처/청과도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생산자, 가공업체,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산 밀·콩 산업 발전협의체 활성화 필요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3	ㅇ 4지표 모두 '직전 3개년 실적 대비 '24년 목표치가 110%를 초과하므로 적극성 높음으로 평가 ㅇ 밀·콩 수요확대 관련하여 소비 증진 등의 파급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 등 보완 필요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	ㅇ 쌀에서 전략작물로의 생산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 마련 필요 ㅇ 소비확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제시 필요 ㅇ 밀 자급률 목표 실현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 ㅇ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한 연구 및 지원 필요 ㅇ 직불제의 확대는 정부 예산의 증가와 연계되므로 가급적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 및 연구개발 필요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

1-1-3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관리 효율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반확충)** 물 부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수요자 맞춤형 물 공급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

- 극한 가뭄 발생에 대비, 저수지 등 신규 수자원 개발 등 용수공급 능력을 지속 확충하여 농업인에게 물 걱정 없는 영농 환경 제공

○ **(식량안보)** 간척지에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 **자급기반 확대**

- 타작물 재배 30%이상 의무화, 임대기간 연장(5→8년) 및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콩, 밀 등 식량자급도 증진에 기여

○ **(제도정비)** 기후변화 시대 물 이용 환경변화 및 농정여건에 맞춰 스마트 농업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표1(수리답률)은 적극성이 높으나 그 외 3개 지표는 적극성 '보통'으로 평가되어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나 일부 감점

- 목표치의 적극성은 과거 3년치 평균의 110% 이상,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 전년도 실적치 110% 이상을 높음으로 판단하므로, 정량 성과지표의 경우 전년도 실적치 110% 이상으로 목표설정 필요

* '24년 성과지표 적극성: 지표1(120%, 높음), 지표2(100%, 보통), 지표3(102%, 보통), 지표4(105%, 보통)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4년 간척지 타작물 재배율 목표치는 57.0%로 전년대비 105%로 적극성 보통에 해당되나, 실적치는 60.3%로 전년대비 112%로 목표치를 106% 초과달성

- '25년은 간척지 신규 임대농지의 벼재배 금지 조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간척지 타작물 재배율 목표치를 전년대비 적극적(11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주민토론회, 국회토론회, 정책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월별로 구체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수리답률, 가뭄발생 피해 방지율, 복합우량농지 조성률, 간척지 타작물 재배율 성과지표는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지표이며 국민이 체감가능한 지표로 판단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성과과리계획상 계획 대비 일정 대부분 완수함 ㅇ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 기관 협업, 부처합동 가뭄대책 T/F 협의체 참여 등의 실적 인정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3	ㅇ 수리답율은 평균 대비 목표치 120% 적극성이 높으나 그 외 지표는 적극성 보통으로 평가 ㅇ '24.12월 기준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복합영농기반 조성 및 맞춤형 물 공급, 국가 물관리 대외협력 강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간척지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등의 추진 실적 탁월로 판단됨 ㅇ 기준 및 제도를 정비하여 향후 후속사업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상위정책 및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성과는 우수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전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 및 언론보도에 대해 종합계획 수립, 규정 개정,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였음

1-1-4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해에 취약한 시설의 보수·보강, 비상수문·배수장 등을 신규 설치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재해 사전예방 추진

- 정밀진단 결과 D등급 이하 시설 보수·보강, 저수지 준설 및 사전 방류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 강화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 확충 등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

○ 관련 규정 개정, 정책 마련, 재난훈련 등을 통해 항구적인 제도·기반을 마련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난대응 훈련 등 실시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추진
- 홍수기(6~9월) 침수 등에 대비하여 시설 관리자의 재해대비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전상황대비 및 사후 대응 등 추진

○ ICT 기반 시스템 및 장치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강화된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통해 국민 관심이 높은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생산 영농환경 조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 증빙 오제출

○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증빙 추가 제출

○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사례, 외부 언론보도 등 실적 제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3	ㅇ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ㅇ 계별 사업별 계획 추진 내용이 월별 추진일정에 반영되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ㅇ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며, 대부분 산출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ㅇ 국민체감도, 외부변수영향력, 전문역량필요성 모두 높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지자체, 농진청, 환경부 등과의 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실적은 모호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3	ㅇ 적극성은 보통/높음/높음/낮음의 평가가 다수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	ㅇ 재해예방, 재난대응, 안전관리, 수질개선 등의 항목에 의미있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ㅇ 계획 수립시 예상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정책 효과가 나타났는지 모호함 ㅇ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재해예방 및 재난대응 정책의 향후 기대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적인 재정 사업 효과가 기대됨 ㅇ 안정적 식량공급 및 농업소득 안정의 상위목표에 부합하나 보다 더 구체적·직접적인 결과 제시 필요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3	ㅇ 각종 정책 평가, 국회, 언론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실적이 우수한 편 ㅇ 개선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가 유지되었으며, 침수피해방지율의 경우 집중호우의 크기 등에 따라 성과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1-1-5	가루쌀 산업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쌀 수급 불균형 완화) 전년대비 재배면적을 4배이상('23년 2.1천ha → '24년 8.4천ha) 확대하여 쌀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

○ (농가 소득 향상) 전략직불제 단가 인상 및 농가 희망 물량 전량 정부 매입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수요창출미흡) 품질개선, 소비촉진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가루쌀 수요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소비자들의 가루쌀 식품 선호, 기업의 원료 선호도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식품 시장조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분석이 미흡

-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건강 유용성 등 홍보 강화 필요

○ (목표치 설정 미흡) 목표치 설정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수정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요창출) 소비자 참여 행사를 통해 가루쌀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자체·외식업체 등과 함께 제품개발 및 공동 홍보 추진

- 대국민 참여 가능한 가루쌀 외식상품 레시피 개발, 가루쌀 요리 영상 등 다양한 경진대회(예: 상금 5천만원) 개최

- 서울 유명거리에 가루쌀 팝업스토어 설치*, 인플루언서 먹방 등 홍보

* (예시: 동화책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의 집') 동화책 컨셉 팝업스토어 설치 및 시민이 직접 가루쌀 쿠키·케이크를 붙여 집모양 만들기 행사

- 가정용 부침·튀김가루 등 프리믹스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가정식 레시피 개발 및 홍보(민간단체 협업)

- 유명한 지역 특산품(경주 십원빵, 천안 호두과자, 해남 고구마빵 등)에 가루쌀을 넣은 리뉴얼 제품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공동홍보

- 프랜차이즈업체와 협업하여 제품개발·출시

○ (목표치 수정) 생산성, 수요추세 등을 고려, 현행 면적확대 속도 조절

- '25년 재배면적 목표는 9.5천ha, '26년 이후는 안정적 수확량 확보, 업체 수요 증가, 수발아 저항성 신품종 보급*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현재 수발아, 수량성 등을 개선한 신품종 개발중이며 '27년 농가 보급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하여 정책 등에 반영한 실적 등이 우수 ○ 과제별로 구체적이고 적절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분기별로 과제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 ○ 지표 3개 모두 대표성 있음 - 지표1: 정책내용을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 대표성 탁월 - 지표2: 정책내용을 간접적 측정 가능, 대표성 우수 - 지표3: 정책내용 직접적 측정 가능, 대표성 탁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 협력체계구축 및 협의실적, 협의경과 반영 실적 다수, '우수'로 평가 - 소비자단체협의회, 외식산업협회, 제과협회, 원광대학 등 포함 <가루쌀 산업발전협력체> 구축 및 운영 - 협의체 운영 실적 10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 - 가루쌀 공급인하요청에 따른 가격인하 등 협의/간담회 결과 반영 실적 다수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 지표1: 52.5%, 지표2: 58.0%, 지표3: 0% - 실적자료 불충분(지표3: 미제출)으로 가중치의 50%로 평가 수행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 가루쌀 생산확대로 인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정책효과는 우수하며, 가루쌀 대체로 밀 식량자급 제고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측면은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객관적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정책효과 발생 정도는 '보통' 으로 평가 ○ 지속적으로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기대효과는 '보통'로 평가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주요정책 평가 및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나 가루쌀 가격경쟁력 강화 및 수요확보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가격인하 및 가공비 지원 등외 품질개선 및 소비촉진 방안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 환류노력도는 '보통'으로 평가

1-2-1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내인력 중개 및 공공형 계절근로를 비롯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소규모 농가 경영부담 완화

-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력(계절근로+고용허가) 도입*, 외국인력 선호 증가 경향에도 불구하고 농촌인력중개 확대**로 국내 농업인력 고용기반 유지

* ('20) 1,388명 → ('21) 2,397 → ('22) 22,200 → ('23) 40,961 → ('24.11월) 56,279

** ('23) 농촌인력중개센터 170개소, 연인원 1,150천명 → ('24) 189개소 / 1,543천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내 인력중개 및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농가 경영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안정적 농업인력 고용을 위한 체계적 중장기 계획, 지원 필요

- 또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등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 해소, 농작업·안전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정적 농업인력 고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농업고용인력의 안정적·체계적 고용, 지원을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국내 농업인력 고용 기반 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

- 농촌인력중개 및 농업인력 교육, 상담,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지원센터 설립 추진

○ **외국인근로자 농작업·안전 교육, 주거여건 개선 및 인권보호 등 정착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대상 농작업·안전 교육 및 교재 제작·보급, 기숙사 건립 확대, 인권·노무 교육 및 상담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 지역·품목별 농작업 인력수요조사, 관계부처 협의·지자체·농협·전문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사업 등에 적극 반영 - 외국인력 고용 확대 등 관계부처 협의, 제도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수립, 추진 ○ 정책 내용을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적절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 성과관리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준수하였음 ○ 농번기 인력수급 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였음 * 농번기 인력 수급 특별대책반 운영(4~6월, 8~10월) ** 농어업 인력 TF 설치, 운영('24.4월~)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3	○ 성과지표 1은 직전 3개년 실적 대비 132.4%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 2는 신규지표임 ○ 성과지표 1(농촌인력중개실적)은 목표치 연인원 1,278천명 대비 127%, 성과지표 2(외국인근로자 운영규모)는 목표치 43,000명 대비 192% 수준 달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 국내인력 중개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영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내국인) : ('23) 1,150천명 → ('24)1,543 / (외국인) 4.3만명 → 8.3 - 계절근로 및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로 소규모 농가 인력난 해소 기대 - 농번기 안정적 인력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국회·언론·감사원 등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및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확대하였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개정(11.26, 법무부)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 수 : ('24) 70개소 → ('25) 90

1-2-2	농업직불금 단계적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가소득 안정)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23:120만원/호→'24:130) 등을 통해 128.4만 농가·농업인에게 2조 3,084억원 지급(전년 대비 66억원 증)

- 경영기반이 가장 취약한 0.5ha 이하 농가에 지원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소농직불 등 수혜자 27천명, 지급 금액 838억원 확대

○ (정책 수립) 「제1차 '25~'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마련으로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향·목표 제시

- 직불제 운영 성과 분석, 농업인·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 수렴·협의를 통해 직불제 확대 정책방향* 도출

*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농지·농업인 지급 요건 완화, 준수사항 현실화, 선택형 직불제 품목·지원 범위 확대, 저탄소 농업 활성화 등

○ (예산 확대)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직불금 확대 추진(전년대비 약 2.5천억원 증액)

* 농업직불제 예산 `23: 2조 8,452억원 → `23: 3조 1,051억원 → '25 : 3조 3,584억원

-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 기본형직불금(면적) 단가 인상,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7년만에 인상, 농지이양은퇴직불 일시지급형 도입 등

<`25년 농업직불제 예산 주요 내용>

1	**기본직불금(면적)** 전구간 **최초 5% 인상**
2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인상 및 지원품목 확대**(1,865억원 → 2,440억원)
3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일시지급형 도입**(150ha, 63억원)
4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등 지원 확대(228억원 → 319억원)
5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지원 활동 추가 등 지원 확대**(90억원→ 233억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노력·성과는 지속 확인되나, 그 외 공익기능 증진 관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공익기능이 높은 선택직불제를 확대하고, 성과지표에도 반영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익직불제의 공익기능 증진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 선택직불제 확대 및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 농업인, 일반 국민, 민원인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 ○ 정책의 수립, 사업 효율화, 홍보 등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 추진계획 수립 ○ 대표성 있는 지표이나, 공익활동과 연관된 국민체감 지표 포함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 유관 기관과의 사업관리반 구성, 통합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특히 데이터 통합 정책 연계, 민원 대응·규제 완화 협업 성과 우수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 3개 지표 모두 적극성이 높음 ○ 3개 지표 중 2개는 목표에 근접하거나 초과 달성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 소득안정 등 농업·농촌 지속성에 상당수준 기여 - 기본직불 지급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 확대 기대 - 공익기능 확대(국민 삶의 질 개선)와 관련된 효과(선택직불)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 개발 필요 ○ 정책성과가 상위목표(직불금 확대 및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에 직접적 기여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정책 목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점에서 우수 ○ 자체평가, 국회 결산, 언론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해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 종합적으로 반영

1-2-3	농업재해 지원 강화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도개선)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개선 노력

- (품목·지역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3개 품목(수박, 두릅, 블루베리)을 도입하여 운영 품목 확대* 및 운영지역 확대**

* (`23) 70개 품목 → (`24) 76 / ** 전국 운영 품목 : (`23) 47개 → (`24) 55

- (보장강화) 수확량의 90%까지 보장하는 상품* 추가 도입, 자연재해성 병충해 상품개발 착수, 재정식·재파종 보장 특약 도입 품목 확대**

* 고보장상품 운영 품목: ('23) 35개 품목 → ('24) 40개 품목(+당근, 양배추, 월동무, 월동배추, 메밀)
** ('23년) 7개 → ('24년) 13개(+대파, 당근, 단호박,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고추)

- (기준 합리화)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밭작물 품목 가입기준 일관되게 적용, 종오리의 보상한도 인상 및 사육기간에 따른 보상한도 차등 적용

* ('23) 전기 안전점검 시 보험료 할인 → ('24) + 화재 안전점검 시 보험료 할인

-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대상품목 7개에서 9개로 확대(+보리, 옥수수), 농가수확량 파악체계 구축*을 위한 도상연습 착수

* (개념) 가입자별 수확량을 현재는 보험사 전수조사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향후 농가가 신고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사가 검증하여 보험에 적용

- (안전보호망 강화) '깁스 특약' 상품 신설·판매, 연금 방식 보험금 수급 선택권* 제공,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를 보험 기종에 포함

* 농업인안전보험 연금 수급기간 : ('23) 5, 10, 20년 → ('24) 기존 + '30년'

○ (재해대응) 신속한 재해 대응 및 복구 지원 확대

- (복구비 지원) 일조량부족, 벼멸구 피해 농가에 복구비와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지원

- (제도개선)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123개 항목의 복구비 지원 단가를 23% 인상하고 농기계·설비 80개 항목을 신규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재해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 수단으로 농업정책보험의 대표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짐

- 보험 품목 및 지역을 확대하고 보험 운영 기준을 합리화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규품목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를 정비, 품목 확대 기반 구축('22.5)

- 적극적인 품목확대 계획에 따라 '26년 신규 품목 도입 및 지역 확대 품목 선정 추진('25.2월~)

○ 이상고온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성 병해충 보장 상품 개발

-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자연재해성* 보장 품목-병을 선정**('24.12)하여 손해평가 방법, 보상기준 등을 마련하여 상품개발 후 판매 착수('25. 上)

* (검토기준) ①기상 현상·조건과 병해충의 발생·확산 간 연관성 여부, ②수확량 감소 초래 여부, ③병해충 피해 회피 불가 여부

** (사과 탄저병) '25년 도입 예정인 '전기간종합위험방식 상품'에 시범 도입
(배추 무름병) 무름병 피해가 큰 '가을작형'에 시범 도입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설문조사, 설명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의견수렴 성과가 인정되며, 과제추진계획이 세부적으로 분명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에 반영됨.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수 및 금액은 대표성 있는 결과지표로서 성과지표로 적절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관계기관과의 협의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농업정책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사 등 독립된 협력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개선 추진. 신규 품목 도입 및 제도 개선과 같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성과지표 1~3 모두 높은 적극성을 보이며, 지표 1~3 모두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이상기후 등으로 다양해지는 피해 양상을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함 - 자연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해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국회 국감, 언론 등 보장범의 확대, 미지급금 신속 정산 등 요구를 반영 실천하였음.

1-3-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24.5.1, 비상경제장관회의)**

-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을 구성*('24.4월), 농수산물 유통·출하 실태를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마련

  *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참여 / 산지,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점검

- **도매시장 경쟁 제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절감**을 위한 세부 과제 마련 추진 중

- 공정위와 협업하여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체계 구축('24.5)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內 '민생 밀접분야 담합 등 행위 신고 사이트' 운영 중

○ **온라인도매시장 '24년 거래목표 5천억 초과 달성(6,737억원)**

-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24.1월)

  * 이용자 · 거래품목 확대, 도매거래 플랫폼 고도화, 통합 물류허브 구축 등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차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5회)

- 과기부 ICT '규제센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2회) 및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4회) 등 안정적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발굴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총 4회)** 추진

  * 산지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선정시 가산, 물류비 지원 등

  ** ❶ 가공농산물 품목 확대(3.27), ❷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50억원 → 20) 및 수산물 품목 확대(5.22), ❸ 개인사업자 거래 허용(6.27), ❹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 도입(11.5)

***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24.1월: 331개소 → 12월: 3,805) 10배 이상 증가

※ 산지-구매처 직배송 등 **물류 최적화**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 확인

*** 농가수취가 3.5% 상승, 유통비용 7.4% 절감, 소비자 후생 3.9% 증가**

○ 도매시장 內 경쟁확대,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제고, 전자송품장 전국 확대 및 정가거래 활성화 등 **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을 제고**

- 성과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 **공모제도 도입** 등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발의('24.12월)

- 도매법인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출하지 지원 등을 위한 공익기금 출연 지속 확대, 법인 평가 시 출하자 지원 등 공공성 지표 평가 강화('25)

- '23년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범도입에 이어 **10개 지방도매시장**으로 **전자송품장 추가 도입('27년 전국 확대 목표)**

- 전자송품장 도입을 통한 사전 출하예정 물량 예측으로 **가격변동성 완화**, 입출차 스케줄링 도입으로 차량대기 시간(9시간→3) 단축 등 **물류 개선**

○ **자동화·정보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APC 구축**을 통해 농촌 고령화·인건비 상승 대응, 수요 맞춤형 상품 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 기여**

- 자동화·정보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APC 누적 30개소 구축 완료(~'24)

* 스마트 APC 구축(누적) : ('23) 14개소 → ('24) 30 → ('25) 60 → ('26) 100

- 상품화 과정 자동화, 공동 선별 물량 확대 등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력 절감**(16명→9) 및 **생산성 제고**(처리물량 : 24톤/일 → 38)

- 품목별 대표성을 갖춘 APC 대상 객관적이고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 APC 인정 기준을 마련**(12월)하여 산지 변화 촉진

- 생산관리 및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APC 지원시스템 고도화('24.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이후 조기 안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24년 거래목표(5,000억)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 '25년 1조원, '27년 5조원 거래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이용자 지속 유치, 이용자 친화적 거래 플랫폼 고도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유통구조 개선 효과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노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온라인도매시장 확대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 기획기사, SNS 등 다각적으로 주요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정책설명회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연간 과제추진계획 수립 * 산지조직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 개선 등 세부과제에 대해 월별 이행계획(19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ㅇ 정책 성과를 대표하고,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민체감도가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분기별·월별 이행계획 19개 완수 ㅇ 범부처 협업 TF 구성, 과기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업 노력도 및 성과가 우수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3개 성과지표의 적극성 정도는 높음 2개, 보통 1개 ㅇ 3개 성과지표 모두 달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로 유통비용(7.4%) 절감, 전자송품장 확대, 스마트 APC 구축 확대 등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ㅇ 향후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및 물가부담 완화, 농가경영 안정 등 향후 기대효과가 큼 ㅇ 상위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함 * (성과목표)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전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대책마련, 제도개선을 이행

1-3-2	농산물 수급안정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제적 수급조절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농업관측 정확도 제고**

- **관측정보 수집 확대, 모형개발** 및 **품질관리체계 개선**으로 **정확도 제고** → 전년 대비 **정확도 16.7% 향상**

* 5대 채소류 가격 전망치와 실제치 차이 : ('23) 8.1% → ('24) 6.8 (전년비 16.7%↓)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 '24년 **마늘·양파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를 통한 선제적 수급 대응 및 '25년산 적정 재배면적 수준 관리

* 중앙주산지협의회 및 지역 주산지협의체(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수급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매비축 및 TRQ 도입을 통한 공급물량 확보·적기 공급**하여 마늘·양파 수급 안정화

* 생육관리협의체(지자체·농진청·KREI·농협)를 통한 생육상황 점검·관리 및 기술지도·병해충 방제

** 마늘 도매가격(원/kg) : (8월) 6,919 → (9월) 7,071 → (10월) 7,068/수급관리가이드라인 안정단계
양파 도매가격(원/kg) : (8월) 1,181 → (9월) 1,223 → (10월) 1,164/수급관리가이드라인 안정단계

- **'25년산 마늘·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수급관리가이드라인상 안정대의 재배면적 수준 유지** 관리

품목	마늘			양파		
가이드라인 안정 가격대 면적(ha)	평균 22,734 (20,382~25,086)			평균 19,097 (17,338~20,857)		
재배의향 (krei)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면적(ha)	22,850	22,904ha	22,895ha	18,180ha	18,318ha	18,340ha
안정가격대 평균 대비 비율	0.5%↑	0.7%↑	0.7%↑	4.8%↓	4.1%↓	4.0%↓

○ **농산물 가격급등락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급조절 체계화**

- 수급불안 **주요 채소류(배추·무·마늘·양파·고추) 가격 변동성**을 최근 **5개년 평균(13.3%)보다 낮게 관리**

*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 : (목표) 12.7% → **('24.10월) 12.1**

- 기상여건 악화로 수급이 불안한 **여름철(8월) 농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근 5개년 평균(4.5%)보다 낮은 3.6% 수준**으로 관리

- **설·추석 명절** 정부 비축, 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으로 **소비자부담 완화**

  * '24년 명절 성수품 소매가격(가중평균)은 전년 설·추석 대비 각각 3.4%, 0.2% 하락

- **김장철**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수산물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

  * '24년 11월 중순 김장비용은 평년 동기 대비 5.3% 하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3건의 성과 지표 목표치는 최근 3~5년 평균값의 105~110% 수준으로 적극 설정하였으나, 달성 난이도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별 달성 난이도를 검토하여 목표치 및 가중치 차등 적용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농업관측의 정책효과 사전분석, 수요자 현장의견, 산지 동향과 소비자 물가동향 등 의견 수렴 ㅇ 성과지표는 정책 내용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 체감도가 높고 외부변수와 전문역량 필요성 매우 높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ㅇ 시기별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범부처 민생물가 TF운영, 생육관리협의체, 주산지협의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3건*의 지표 모두 목표 대비 실적 100%이상 달성 * 농업관측 정확도(%), 채소류 계약재배 비중(%), 채소가격안정제 농가 참여도(%)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농업관측 정확도 전년대비 16.7% 향상, 생산자 중심의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등의 정책효과 발생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전년도 정책 평가 지적사항,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수립 및 이행

1-3-3	과수·과채 수급안정 및 원예산업경쟁력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한 **출하량 조절**, 계약재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공용 수매** 등 다양한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계약재배 물량 비중**은 **평년생산량 대비 6.5%**로 상과목표 달성

- **과수 계약재배 물량** 활용* 및 **과수 지정출하 시범사업**** 신규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설·추석 **성수품 공급** 및 **가격 안정·정상화**

* 명절 공급 : ('24년 설) 사과 15천톤(평시비 380%), 배 13천톤(평시비 372%)
('24년 추석) 사과 15천톤(평시비 388%), 배 14천톤(평시비 361%)

* 출하시기·출하처까지 관리하는 과수 지정출하 사업(2만톤, 258억)을 '25년 신규 도입, 추석 성수품 특별대책기간 시범사업 운영('24.8.26.~9.13., 359톤)하여 안정적 물량 공급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 억제

-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물량부족 우려 품목**(배)의 **수요 분산** 및 계약재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공용 수매 지원**

* 일소·열과 피해로 저장성이 저하된 배의 가공용 수매를 지원(10~12월), 퓨레 등 배 **가공품 공급 확대를 통한 수요 분산 및 농가수취가격 보전**
⇒ 배 일소·열과 피해 저품위과 1만톤 가공 지원(10억원, 정부지원·자조금 포함)

- 폭염 피해로 토마토 공급부족 및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재배 농가를 통한 공급 확대**(농협 자금 지원 병행)로 토마토 가격 안정 기여

* 10월 상순까지 가락시장 1일 평균 반입량은 68톤이었으나, 토마토 출하 확대 시행 기간 동안 1일 평균 반입량 101톤으로 증가

* 반입량 증가로 토마토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가격안정 기여
⇒ (10.상순) 52,528원/5kg → (10.중순.) 45,858원/5kg, 전순대비 12.7% 하락

-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의 상시 운영을 통해 과실 **생육시기별 위험요소**의 **선제적 예방관리** 추진('24.1월~, 18회)

* 전국구 협의체 담당자들의 긴급·실시간 업무협의를 위한 '**컨퍼런스 콜**' 형태 회의 진행

○ 국내 **과수 산업이 침체**되고, **마케팅 조직 통합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취급액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점APC 평균 공동계산액 281억원 달성 '24년 목표치(197억원)를 초과 달성**

- 통합마케팅조직의 **품질관리** 등을 통한 **과수 농가 수취가격 제고**

* 지역공동통합브랜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교육, 브랜드 마케팅 등으로 일반 브랜드 상품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시장 판매 가능

- 통합마케팅 조직의 **판로 확대** 및 **과수거점 APC 스마트화 확산** 등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도모

* 스마트 APC 선도모델 우수사례(충주과수거점APC) 공유를 통한 생산관리 시스템화, 로봇 자율화 등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확산 노력

○ 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변수**(사업계획 변경, 사업포기, 착공지연 등)가 있음에도 '24년 사업 수요 기준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률은 7.9%로 목표치(7.8%) 초과 달성**

- 온실 현대화 시설 및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

* 시설농가의 경우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으나, ICT 장비 및 정보시스템,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확대로 에너지비용 절감

⇒ 농진청 협업, '시설원예에너지절감설비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ICT융복합 장비 등 스마트팜 도입이 생산량,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량 증가, 노동시간 절감 효과,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화에 기여**

* (토마토) 생산량 37.6%↑, 노동시간 522시간↓/(딸기) 31.6%↑, 427시간↓/(파프리카) 34.5%↑, 99시간↓ [출처: 스마트팜 확대가 시설채소 수급안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충남대 산학협력단, '22.11]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중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과수·과채 생산안정 지원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해예방, 신품종 보급·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KREI 자문회의 및 농협 등 경제주체의 의견 청취 후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함 - 안정적인 생산량의 확보, 농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과실·과채 계약재배 비중 및 APC 공동계산액,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률은 직관적이고 명확한 지표임 - 다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추진계획 및 스마트팜 보급률 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노력이 돋보이고, 과제 추진계획이 예정대로 무난하게 진행됨 ㅇ 기상청과 이상기후, 온난화 관련하여 협업이 필요해 보이며, 부 내에서도 다양한 소관 업무와 협업 가능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과일·과채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수입 과일을 통한 대체 소비유도 등을 노력하여 전년대비 사과·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였음 ㅇ 다만, 수입의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 기여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경제성 분석이 필요해 보임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계약재배 확대, 통합마케팅, 시설원예 스마트팜 추진으로 소비자 물가 및 농가 수익 안정화에 기여한 바 정책효과가 우수함 ㅇ 다만 기후변화 적응, 온난화에 따른 재배적지 이동, 과수농가 노령화 노동력 부족 등 장기적인 수급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정책효과는 다소 미흡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주요 정책평가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해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를 시행 하는 등 외부지적에 대한 개선사항이 충분히 검토됨

1-3-4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축산 확산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장문제 해결**) 축산농가 개별 문제에 맞는 ICT 장비와 운영 솔루션의 패키지 보급 확대로 환경문제, 생산성 향상 등 문제 효과적 해결

- 폐사율 감소, 착유량 향상 등 총 21개 패키지 모델을 선정 보급하고, 컨설턴트 컨설팅을 통해 생산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및 악취저감

○ (**현장교육 확대**) 스마트축산 우수농가를 서포터즈로 위촉하여 운영 노하우를 일반농가와 공유 확산

- 멘토-멘티를 연결하여 현장 멘토링, 스마트축산 운영 노하우의 농가 간 확산을 통해 운영 효율성 확대

○ (**빅데이터 구축**)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축산 솔루션 개발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개방·공유

- 축종·농장별 축사내 환경정보와 착유량 등 생산성 등의 데이터셋을 구축, 데이터 컨설팅과 솔루션 개발 등 민간 활용 지원

○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축산단지 조성규모 다양화, 조성방식 완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활성화

- 신규로 2개소를 선정하여 생산성 향상, 악취·방역 관리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축산농가, 지자체, ICT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여론 파악 및 계획수립

○ 스마트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필요

- 스마트축산의 정책 효과 확산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관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 축산농가, 지자체, ICT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문제해결 필요 ○ ICT 활용 축산업 생산성 향상률과 스마트축산 보급에 따른 정성적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 솔루션 중심의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참여 농가 지원등 과제별 추진계획을 충실히 완료 ○ 청년농 간 운영 노하우 학습 및 멘토링을 위한 스마트축산 서포터즈 구성·운영으로 협업체계 구축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 '24년 목표치는 12.9%는 3년전에 비해 2배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스마트축산 보급실적은 단순지표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 축산현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ICT 장비 세트와 운영 솔루션 묶음 패키지 보급 추진 등의 정책효과 기대 -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멘토링,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정책효과를 창출했으나, 전반적인 축산업 혁신에는 한계가 있음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전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장 의견 수렴의 실질적 반영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흡

1-3-5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쟁력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축산물 수급안정**)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소비자 물가안정 및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

- 3월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한 축산물 할인지원,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5월 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6% 하락하는 등 신속한 물가안정 효과 발생

*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 결정(3.18.) 직후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3.25.)하고, 유통업체의 부적절 행위를 지속 관리·감독하여 조기에 사업 효과 발생 및 목적 달성

○ (**산업 발전 대책**) 한우 도매가격 하락 및 FTA에 따른 '26년 미국산 소고기·유제품 무관세 수입에 대비하여 한우·낙농산업 발전대책 수립

- 체계적인 한우 사육 마릿수 관리 및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자급률 하락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 (**밀크플레이션 해소**) 우유 생산비 상승에도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낙농가-유업체 원유가격 동결 합의

- 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를 적용하여 '23년 우유 생산비가 전년비 4.6% 상승했음에도 협상을 통해 음용유 가격을 동결하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인상 최소화

○ (**가축 질병 대응**) 고병원성 AI 확산에도 선제적 대응으로 계란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살처분 농가 조기 회복 달성

- 선제적인 중추 육성·비축 및 할당관세, 종계 생산주령 연장, 미국산 신선란 도입 등을 통해 산란계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계란 및 닭고기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

* 계란 : ('22.1~3월) 6,416원/30구 → ('23) 6,401 → ('24) 6,266 ('23년비 2.1%↓)
* 닭고기 : ('22.1~3월) 5,548원/kg → ('23) 5,908원/kg → ('24) 5,758 ('23년비 2.5%↓)

○ (**가격 결정체계 개선**) 60여 년간의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고시 폐지 및 표준거래계약 방식 등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 생산자단체의 희망가격 고시 방식을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발표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계란 수급 및 가격 관측을 고도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관련기관 정책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나, 대부분 지자체 및 산하기관과의 협업으로 타부처와의 협업 확대 필요

- 산란계 케이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추진 성과는 있었으나, 재정당국 외 타부처와의 협업은 부족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비 대비 도매가격을 비교하는 성과지표를 사용하였으나, 지표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향후 정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요자,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로 개선보완 필요

○ 상위목표(식량주권 확보 및 농가경영안정 강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은 인정되나, 농가 지원방안은 부족하였음

-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소비자물가안정 정책 시행과 함께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화하도록 개선보완 필요

○ 과제 추진계획 수립 시 한우 공급 과잉, 고병원성 AI 대응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수립했으나 계획의 체계성 부족

- 과제 추진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월별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간담회 개최, 제도 개선, 법 개정협의 등 현장의견 수렴 노력이 돋보임 - 생산자·소비자 위한 경제성, 축산업 자체의 당면과제 해결 지표 설정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다양한 입장을 가진 '부처 외부'인 주체와의 협력 체계가 우수한 수준에서 이루어짐 - 축산물 관련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 대응 * 협업이 있었으나 대부분 지자체 혹은 산하단체/기관으로 평가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사업이 수행되었음 - 지표1과 지표2는 '농가소득안정'과 '소비자물가안정'이라는 두 요소가 서로 간섭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남 - 계란 가격 등에 대해서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상위목표에 우수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정책효과가 어느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되나, 해당 정책만의 효과인지 식별 여부에 대한 고민 필요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각종 정책 평가, 국회, 언론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실적이 탁월함 ㅇ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은 인정되는데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함

1-3-6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구조개선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축산물유통법) 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여러 법에 산재된 축산물 유통 규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하는 법률** 마련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24.7.16), 국회 심의 절차 진행(8.26.,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회부)

○ **(축산물 유통 디지털화)** 안정적인 축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 후 **축산물 유통거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자 표준서식 및 시스템 마련**

- (온라인경매) 도매거래 플랫폼 고도화, 원격지 온라인 상장, 부분육 유통 확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축산물 유통 효율화

* 입찰 등 축산 도매거래 최초 신규 거래 방식 적용으로 거래 시간 절감 등 유통효율화 지원

- (전자송품장) 디지털 기반 축산물 도축·출하 플랫폼 구축으로 기관 간 정보 일원화, 도축·출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농가 만족도 제고

○ **(축산물 유통정보 활용) 데이터 기반 수급 분석·예측**을 통한 정책 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에 공개하여 **투명·공정한 유통체계** 구축

- (수급지원플랫폼) 정보활용도 강화를 위해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정책지원을 위한 수급 상황판 구축 및 제공

- (축산물유통정보조사) 축산분야 가격·유통·소비·해외정보 조사 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 주체별 의사결정 지원

* 축산 유통정보 6종의 평균 이용건수는 목표(72.8백만건) 대비 103백만건으로 141% 초과 달성함

○ **(이력정보 활용) 축산물 유통 투명화 및 수급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물 유통의 전후방을 지원하는 **이력정보 활용 제고**

- (부가가치 제공) 축산물이력제 **이행단계별 이행실태 점검**으로 이력정보의 품질을 지속 관리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정보 제공 등으로 **축산정책을 지원**하여 **축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 (정보활용) 이력데이터랩,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축산물 이력정보를 공개·제공**하여 **전후방 산업 지원**

  * 축산물이력번호 발급건수 대비 정보조회수는 목표(40.20건당조회수) 대비 44.05건 당조회수로 109.6% 달성하였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부 입장에서 국회의 법률 제정안 검토 일정 조율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축산물유통법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안 검토·심의를 통해 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나, 예산 등 다른 현안에 따른 검토 우선순위가 있는 국회의 일정 조율 등은 정부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설명 등 적극적인 국회 대응을 통해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일 것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및 반영 여부는 양호하며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등이 우수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과제를 일정에 맞게 추진했으며 식약처,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추진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 정성지표 및 정량지표 적극성이 높고 목표치를 달성함 - 다만 법령 제정 성과지표는 법령 제정안이 국회 제출('25.7.16.)되어 국회 심의 절차를 진행(8.26.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회부)으로 거의 달성으로 간주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 축산물 유통기반 마련, 축산물 유통 디지털화, 축산물 유통정보 및 이력정보 활용 등을 통해 정책효과 발생 - 축산물유통법 제정 등을 통해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재정사업 자율평가,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및 환류를 적정하게 수행함

1-4-1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식품바우처)**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 및 국산 농축산물의 수요기반 마련**

○ **(식생활교육)** 교육·체험 기회 확산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자발적 노력 향상 및 우리 농산물·농업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 **(지역먹거리계획·직거래활성화)**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우선 공급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먹거리 계획수립 추진 **지자체의 농민의 판로확대 등으로 중소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에 기여**

○ **(할인지원)** 농축산물 소비자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추진**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 경감에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역단위 푸드플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감소 및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파악 필요

- '2018년부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요가 감소하여 사업이 중단('24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지원사업의 사업중단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법 검토 필요

- (조치계획)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먹거리계획 전문가(FD) 자문을 통하여 계획의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를 통한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 세부과제별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 또는 반영 계획 수립 ○ 과제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표과제별로 분기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여 추진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기재부, 복지부, 과기부,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고, <로컬푸드 구매포인트제지원사업>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기관, <농축산물할인지원 사업>은 해수부, 중기부, 기재부, <식생활교육 지원>은 교육부, 국방부, 대한영양사협회 등, 다수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하여 시행한 실적 다수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 두 지표 모두 목표로 하였던 성과를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 농식품바우처,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직거래, 할인지원, 식생활교육 등 사업을 통해 농식품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효과 크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자체·재평가, 국회 등의 개선 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환류, 이행한 것으로 판단함

1-4-2	농축산물 안전 및 안전관리 관리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산물)** ①농약 사용에 대한 농업인 인식 및 생산단계 부적합률 개선, ②농산물 생산·유통체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부처협업과제 추진·완수

- 부적합 상위 시·군 대상 안전성 중점관리를 통하여 효과적 부적합 농산물 감소 및 농약 관련 인지도 확산과 실천력 향상 성과 달성

> · 경기·강원·충남·전북 등 20개 시·군 부적합(건) : ('23) 542건→ ('24) 413(△23.8%)
> · 농업인 인지도(%) : 농약 사용수칙 ('23) 97.6%→ ('24) 98.4, 처분사항 ('23) 85.4%→ ('24) 93.0

- 범부처 합동조사단 구성* 및 부적합 원인 공동조사,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산·유통단계 부적합률 개선(△8.0%)

  * 농식품부(생산단계), 식약처(유통단계), 농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학계 전문가 등

○ **(축산물)** ①축종별 동물용의약품 확충·정비를 통해 축산농가의 동물약품 사용환경 개선, ②'24년 축산물 PLS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집중홍보를 통해 PLS 인식도 제고 및 긍정적 효과 조성

- PLS 확대 대비 소수축종(염소, 오리 등) 동물용의약품 확충을 위한 안전성 검증(16품목) 및 품목허가 확대(안) 마련('24.12.)

- '24년 축산물 PLS가 시행된 주요축종 사육농가 대상 인식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10%이상 인식율 상향(83.3%→91.7) 달성

○ **(원산지)** ①원산지 둔갑, 사회적 이슈 등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 품목 재지정, 신규 지정 확대 및 분류기준 정비 완료, ②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위한 부처협업과제 추진·완수

- 유통이력관리 품목 재지정(26개), 신규대상(4개) 품목 확대, 분류기준(22품목→33) 정비 완료

-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소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기관 합동점검, 식약처, 식생활안전관리원 등 협업을 통한 홍보 추진

  * 고속도로 휴게소 점검('24.7.1~5.), 급식류 합동위생점검('24.9.23.~11.6.), 집단급식소 대상 원산지 표시방법 등 안내('24.3.6.), 식품안전나라 원산지 표시 홍보 자료 게재 협조요청('24.5.1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산물)** 원인 「농산물 PLS 시행반」을 전국이 아닌 20개 시·군 대상으로 운영하여 한정적 정책 관리·목표로 평가됨

- 분석 행정력, 예산 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년도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 발생 상위 시·군을 대상으로 「농산물 PLS 시행반」 편성·운영

  *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 평균 : 상위 20개 시군(27건), 전국 165개 시군(9건)

- 결과 전국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부적합 농산물의 효과적 차단을 통한 대국민 대상 먹거리 안전성 확보는 무한정적 정책 관리·목표로 판단됨

○ **(축산물)** 원인 '24년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라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PLS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설계 대상이 제한된 것으로 평가됨

- 분석 가축사육농가의 제도인식은 PLS 제도정착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시행대상 주요축종*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PLS 인지도 조사 실시

- 결과 축산농가 대상 집중홍보 실시결과 PLS 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목표치 이상 달성했으나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정책설계 대상 확장 필요

○ **(원산지 관리)** 원인 수입농산물 전반이 아닌 이력관리대상 품목의 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 정책으로 평가됨

- 분석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거래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지정·관리

- 결과 수입농산물등 이력관리 대상품목은 관계기관 수요조사 및 심의회를 거쳐 목표치 이상 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정책 수혜자 확대를 위해 농민단체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중관리를 위한 행정력 편성 필요

○ 축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초 이행주체인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교육과 더불어 최종소비자인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 필요

○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대상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사회적 이슈 등 공정거래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 위주로 관계기관 수요조사 및 심의회를 거쳐 대상품목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현장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농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을 더욱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적 목표가 한정적임 ㅇ 축산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현장의견 수렴 노력이 서술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과제추진계획의 수립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 ㅇ 수입농산물등 이력관리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수요조사 의견수렴 필요하며,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공정거래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 위주로 수입농산물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목표가 한정적임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국무조정실 등 상위기관 중심 다양한 협업체계 적극 추진 ㅇ 원산지 관리를 위해 해수부 등과 합동점검 및 기관간 협업체계 적극 추진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적극성 - (지표 1) 높음, (지표 2) 높음, (지표 3) 높음 ㅇ 성과지표 초과 달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	ㅇ 농산물 안전관리 효과는 향후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ㅇ 상위목표에 우수한 수준에서 부합함 ㅇ 수입농산물 원산지 관리에 대한 정책효과 확인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3	ㅇ 개선 방향 구축 및 실행까지 이루어짐 ㅇ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1-5-1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원국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시설 구축, 농기자재 지원 및 영농 기술전수를 통해 **기존 생산성 대비 2배 이상 향상** 달성

- '캄보디아 칸달주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멜론 생산성 기초선 대비 137% 증가, 시장 판매 금액 2.8배 상승

* (생산성) 0.52kg/㎡ → 1.23kg/㎡(2.4배↑), (판매금액) 5.4$(현지판매가) → 14.9$(2.8배 ↑)

○ (**글로벌 식량안보 기여**)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전년대비** ('23년 5만톤) **2배 확대**하여 글로벌 식량위기 해소

- 글로벌 식량가격 상승, 분쟁에 따른 공급망 장애에도 불구하고, **11개국***의 난민·이주민 등 **약 700만명**에게 당초 일정대로 **적기 분배**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예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 (**아프리카 협력 확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농업 컨퍼런스**를 **개최**, 교역·기술 교류 촉진 및 **우리나라의 글로벌 입지 강화에 기여**

* 3개국 아프리카 정상 및 10개국 장·차관 참석, 6개 국제기구, 30개국 이상의 아프리카 정부·기업·시민단체, 국내외 언론 등 총 300여명 참석

○ (**ODA 제도개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ODA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관리 및 환류체계를 강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4.10),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사업관리 지침」제정('24.7.),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개정('24.5.)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ODA 추진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격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량원조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쌀 수급 조절에 기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이해관계자, 수원국 정부, ODA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짐 ㅇ 생산성 향상 지표의 경우, 결과지표로서 국민체감도가 높으나, 제도개선 지표의 경우 산출지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성과관리시행계획 대비 적절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 - 관계기관 협력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협업 노력도 적절히 이루어짐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이 높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K-농업기술의 전파 효과가 가시적인 것으로 평가 - 계획대비 사업의 성과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국가적 차원의 기대효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3	ㅇ 국조실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이행이 이루어짐, 자체평가시 검토·지적사항도 포함될 필요

1-5-2	농업통상 및 국제기구 대응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기구·협력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연대 및 대응 강화**

- G20, APEC 등 **고위급 협의체**에서 **우리 농업정책**을 **공유**하고 **K-푸드·농업, 스마트팜** 등 **우수성 강조, 수출 증대 기회 창출**

* G20 정상회의(11.17)에서 한국의 인도적 쌀 원조 규모 확대(10→15만톤) 약속

* G20 농업장관회의(9.12~13)에서 농촌지역 활성화, 청년농 정책을 공유하고 스마트 농업 등 혁신기술에 대해 소개

* APEC 정상회의(11.19)에서 식량안보 강화 방안으로 스마트팜 기술 활용 제시

* APEC 부의장국('25년 의장국)으로서 '식량 손실·폐기 예방 및 감축 원칙' 논의 시 한국의 재해예방시설 확충, 스마트농업 확대, 농식품 중소기업 지원 정책 소개

* FAO 아태지역 총회(2.19)에서 한국의 스마트농업, K-라이스벨트 확산 등 글로벌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강조

○ TRQ 등 **농업 관세제도**의 **공정·투명한 운영 및 개선**으로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

- 관세청 협업을 통해 TRQ 신청인 자격을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여 TRQ 부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24.12)

- 수출국의 병해로 공급이 부족한 사료용 옥수수 종자에 TRQ 증량(130톤, 3천여 농가 사용량)을 긴급 적용하여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24.4)

○ 주요 **농산물 국제가격·수급 분석**, 농업**협상 동향 공유**, 국내 정책의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쌀 해외원조, 수입안정보험 정책 설계 전 WTO 농업협정 등 규범 검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 목표 달성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체감도 향상 측정지표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업통상 및 국제기구 대응 강화를 통해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 측정 지표 설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계획 수립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이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계획상 과제별 수행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제회의·협상에 대응하고, 관세청 협업을 통한 수입관리 제도개선 추진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적극성 높음 ○ 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 실적 달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 국제기구 등에서 적극적 입장 개진, 관세제도의 공정·투명한 운영, 통상이슈 확산 관련 구체적 사례 등 제시, 정책효과 우수 ○ 농업통상 및 국제기구 대응 강화를 통해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할 필요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정책효과를 정량적 성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TRQ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적 사항을 이행함

1-5-3	농축산물 수출검역장벽 해소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출검역 장벽해소) 중점 추진 품목에 대한 전략적 검역협상을 추진하며 신규 수출 검역 협상을 개시·타결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통관 재개 및 검역요건 완화 등으로 기존 시장의 검역장벽 해소

- (신시장 개척) 신규 검역 협상 타결로 농축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신규 협상을 개시(11개국 11품목)하여 수출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對베트남 참외·멜론, 對미국 수삼, 對EU·영국 열처리가금육, 對사우디 말 등

- (수출애로 해소) 농축산물 수출 과정 중 확인되는 애로사항이나 업계 니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여 검역장벽 해소

* 對홍콩·싱가포르 식용란 수출재개, 對일본 말 검역조건 완화, 對베트남 신선가금육·사료 검역강화 조치 대응 등

- (검역요건 완화) 과거에 체결된 높은 기준의 검역요건으로 수입이 중단된 품목 등에 대해 국제기준 및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개선·완화

* 對필리핀 딸기, 對호주 배·포도, 對싱가포르 식용란 등

○ (안정적 공급망 구축) 일부 국가에 편중된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및 지역화 인정 등 제도개선 다각화

- (수입선 다변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품목에 대하여 수입선 다변화, 수입허용 지역 확대, 질병요건 완화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전략적인 검역협상 추진

*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베트남산 포멜로, 텍사스산 자몽 등

- (제도개선 추진) 기존 수입국에서 가축질병 등이 발생하더라도 수입국 내 청정지역으로부터는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화* 인정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수출입 검역 협상 추진 시 상대국과의 정치·외교적 상황 등에 따라 협상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협상이 중단될 수 있음

○ 장기성, 단계성, 상호성 등 수출 검역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수출 검역 협상 계획 마련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증가하는 비관세장벽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물 해외시장성 및 검역위생조건을 조사하고 국가-품목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조속한 협상 타결 집중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 생산자 및 수출업계 수요조사부터 출발하여 외국시장 분석 및 국내 여건 검토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됨 ○ 구체적이고 적절한 추진계획을 월별로 수립하고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국민 체감이 높은 지표임에 틀림없으나,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지표인지 고민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 추진실적에 대한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함 ○ 국내 부처 의견 수렴 및 국제기구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수출 검역장벽 해소에 대응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 지표 모두 목표로 하였던 성과를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 농축산물 수출 검역장벽 해소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 ○ 신규지표인 수출 검역협상 타결을 위한 협상 및 대응 건수, 수입 협상 대응 및 검역요건 완화 건수는 단년도 자료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점 존재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주요 정책 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언론이나 현장애로 등을 충실히 반영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 경주

1-5-4	전략적인 FTA 협상 대응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이해관계자 등 소통)** 농업협상 대응 시 우리 농업계(이해관계자)의 의견·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추진

- 농업인단체 설명회·간담회, 전문가 초청 교육 및 포럼,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를 통해 현장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FTA 협상)** 농산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위생·검역 권한 보장 및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목표로 협상 진행

- **(조지아)** '23.11월 협상개시 후 정식협상 및 회기간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 선언('24.11.)

- **(기타)** 몽골(2-4차), 태국(1-3차), 말레이시아(4-5차) 신규 협상 및 칠레(9차), 인도(10-11차), 영국(1-3차) 개선 협상 등 대응

○ **(FTA 이행)** FTA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협상 상대국과의 농업교류 발전을 위해 지속 협의

- **(뉴질랜드)**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통해 농림수산협력약정 개정 서명 및 상호 협력 의제 논의

- **(미국)** 한-미 FTA 농산물 무역위원회를 통해 협정 이행 상황 확인 및 관련된 다양한 정보 공유

○ **(협상 지원 및 역량강화)** 「FTA협상지원시스템」 개선 및 FTA 규범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포럼 등 개최를 통해 협상 지원 및 역량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추진계획 수립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분기별·월별 과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3	ㅇ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 발효 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으나, 과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ㅇ 추진계획을 일정에 따라 완수함 ㅇ 전략적 협상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성과지표 모두 '23년 실적 대비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농민단체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자체평가 지적사항 및 국회 질의 사항 등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하고 이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려 노력함

1-5-5	라이스벨트 실질적 성과 창출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생산보급**) ‘24년 7개국에서 벼 종자 시범 생산 및 생산량 증가

* (생산량) 3,187톤(목표 3,000톤 대비 106.2%↑), (생산성) ’23년: 3.6톤/ha → ’24: 4

- ’23년산 생산된 벼 종자 2,321톤 중 품질인증 및 검사 등을 거친 벼 종자는 참여국 정부 협의하에 농가 보급 완료(‘24.상반기)

○ (**생산단지**) 7개국(8개 사업) 정부와 RD 체결(~’24.12.31) 및 사업수행업체(PMC) 선정 완료로 국가별 종자 생산단지 조성 본격 추진

* 가나(착공), 감비아·세네갈(재배단지, 농기계)·카메룬·케냐·우간다(설계 중)

○ (**사업 확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4개국 추가 MOU 체결(‘24.6.5)로 K-라이스벨트 사업 확대 마련

*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짐바브웨, 앙골라

○ (**수출 지원**) K-라이스벨트 연계, 한국 농자재 기업 對가나 국산 비료 수출계약 및 협업 MOU 체결(’24.12월)

* 한국 ㈜에프디파이브·가나 현지 유통업체와 한국산 농자재 수출 계약 체결(34만불) 및 가나 현지 거점 농자재 생산시설 구축 MOU 체결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K-라이스벨트 사업 관련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 국내 농업분야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방안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K-라이스벨트 사업 연계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은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현장방문, 설명토론회, 실무협의, 양자회담 장 의견수렴 결과 관련 정책 반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ㅇ 분기별, 월별 과제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ㅇ 성과측정에 대한 대표성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별 추진계획을 준수함 ㅇ 관련 기관과 정책 간 협업체계는 구축했으나,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이 제한적, 실질적 성과 창출에 미흡한 부분 있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 높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대상 국가의 식량안보 강화와 국내 농기자재 수출 가능성 확보에 기여 ㅇ 외교협력, 기술협력 확대, 경제적 효과 창출 측면에서 우수하며 아프리카와의 농업협력 강화와 대한민국 농업 강국 이미지 확립 기대 ㅇ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난 개선 및 국제협력 강화에 기대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법률 개정 등 정책개선 및 환류 노력 있음

2-1-1	청년 후계농 육성 확대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청년농업인 육성)**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발('23: 4,000명 → '24: 5,000명, 누적 17,600명)

** '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초기소득·농지·자금·주거' 등 종합지원 추진

○ **(귀농귀촌)** '24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 적극 추진**

- **(정보제공)**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2차 구축 완료**('24.5) 및 정보·서비스 제공*

* (청년특화) 청년층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탄탄대로' 구축·운영 / (일자리 정보) 기존 고용24, 도농인력중개시스템 외 사람인 및 잡코리아 연계 등

- **(준비지원)** '귀농귀촌 **준비커뮤니티'*** **등 사전 준비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 정착 지원**

* ('23) 10개 시군, 62팀, 702명 참가 → ('24) 20개 시군, 95팀, 1,102명 참가

- **(자금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영농 초기 자금 부담 완화** 등 **영농 진입 장벽 해소** 및 **농업인력 육성 기여**

* 대출실적 : ('22) 1,645억원(1,458명) → ('23) 1,648(1,492) → ('24) 1,828(1,624)

○ **(농업교육)** 농업계 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및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등을 통한 **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 농고·농대생 취·창업률 및 청년농업인 역량 제고

* 지원학교 취·창업률 : 농고 53.4%(비지원학교 대비 8.2%p↑), 농대 43.9%(25.1%p↑)

** '24년 9개 농업마이스터대학 내 17개 청년농CEO 과정 운영, 284명 교육 수료

- ICT 기술 등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변화관리 능력 제고

* 교육 후 역량향상률 : 스텝업 기술 교육 46.0%, 첨단기술품목특화 교육 28.21%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유입 확대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청년농업인의 육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농업교육 관계기관 의견수렴, 귀농귀촌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 정보제공 확대, 자금지원 강화, 농업법인 지원체계 일원화 등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성과 우수 ㅇ 사업 계획이 달성되도록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일부 성과관리계획과 평가보고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일부 일정 완수의 증빙자료가 부재하나 대체로 추진계획을 준수하고 있음. ㅇ 정책협의체, 관계기관 협의체, 선도농단체회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3	ㅇ 지표 1, 2, 3 목표치 적극성 보통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정착지원사업 선발규모 확대 및 자금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경영역량 제고에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귀농귀촌 지원 체계도 구축하였음 ㅇ 맞춤형 정책개선, 통합플랫폼 구축, 우수성과 공유 등을 통한 상위목표 '청년농 농업농촌 유입 및 안정적 정착 확대' 달성에 기여 정도 '우수'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전년도 주요 정책평가, 국회지적사항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반영하였음 ㅇ 전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실행되고 있으며,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책 개선 및 환류 이행 실적 '우수'

2-1-2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 및 농지제도 개편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 청년농의 희망농지 구입 지원 강화와 임대농지 최대한 확보로 농지은행사업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비율 증가

- 청년농 대상 농지 최우선지원에 따라 지원 인원 및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청년 창업농 선발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 추진성과 제고

* 청년농 농지임대지원 인원 및 비율 증가 추세 : ('21) 2,154명(50.0%) → ('22) 2,690명(58.1%) → ('23) 3,124명(64.8%) → ('24) 3,711명(74.4%)

** 청년 창업농 선정인원(누계) : ('18~'22) 8.6천명 → (`23) 12.6천명 → ('24) 17.6천명

○ (농지제도 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현장 수요가 높은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등 제도 개편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직·간접적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청년농 농지임대·매매 지원 성과도 중요하지만 청년농의 영농정착이라는 궁극적인 정책 목적에 미치는 효과 분석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투입이나 산출 지표보다는 결과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성과지표 가중치도 현재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가 80%, 농지제도 개선이 20%인데, 중요도 등 고려하여 가중치 검토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ㅇ 계획 수립을 위한 사존 조사가 개별 사업별로, 각종 간담회, 지자체 의견 수렴을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히 이루어짐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별 추진계획을 준수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적극적 수준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는 농업의 스마트화 추세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생각됨. 사후적으로도 청년농의 정착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효과 검정이 추가적으로 필요 ㅇ 계획대비 사업의 성과가 다양하게 모두 우수하게 나타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국회, 언론, 정책평가 등의 지적 사항에 대해 매우 우수한 수준에서 대응이 이루어짐

2-2-1	스마트농업 확산 및 벤처·창업기업 육성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도기반)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전통농업 중심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마련 및 발표**(3월)

-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을 제정**(7월)하였으며, 법령 시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차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7월~)

○ **(스마트팜 확산)** 스마트팜 보급 확산으로 농업인의 워라밸 가능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운영 및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조성('23년 누적 9개소 → '24년 13개소)하여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기회 지원

* 청년농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온실을 제공하여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11월 기준 청년농 164명 입주 완료

- 품목별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솔루션 보급** 거점 역할을 하도록 **주산지·품목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20~'25, 5개소)

* 노지작물 주산지에 현장 적용성이 높은 장비(드론 등)·서비스(관수관비 등) 및 기업주도 기술 실증 지원

- **대내외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수직농장 입지규제 개선** 및 **산업화 지원 강화**

* 농지·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수직농장 경영 희망 농업인의 토지비용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

- 스마트농업의 핵심 주체인 청년 우수교육생 선발(208명) 및 장기 교육(20개월)으로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민간의 **스마트농업 솔루션 개발·현장보급**, 스마트팜 기자재 **국가표준 지원**,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개최** 등 **스마트농업 기술·**

서비스 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 기후변화, 수급불안, 노동력 부족 등 **농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솔루션·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

  * 금년도는 그간('22~'23) 사업을 통해 발굴한 우수 솔루션을 생육환경·병해충 등이 유사한 주산지 3개소를 선정하여 농가에 보급, 기존 농가 스마트팜 전환·규모화

- **AI·데이터** 관련 **기업·학계의 관심 제고** 및 데이터 기반 모델 발굴 지원을 위해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개최(본선: '24.9~'25.2)

○ **(벤처창업) 사업화자금, 투자유치, 판로확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창업·성장 도모**

- 농식품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 창업기획사 육성**('23년 4社→'24년 8)하고, **사업화자금**(375개사), **컨설팅**(벤처창업센터 6개소) 및 **판로 확대** 등 지원

  * 예비창업자 50명(7백만원), 창업기업 300개사(25백만원), 우수첨단기술 25개사(210백만원)

-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기업 투자유치액 396억원 달성**(10월 기준) **및 크라우드 펀딩**** **지원**(10월 기준 56社, 123억 달성) **등** 민간주도의 투자생태계 활성화 기여

  *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초기 투자 및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
  ** 농식품 기업 펀딩 컨설팅·수수료 지원 및 우수기업 후속 지원 확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계획수립 단계에서 관련 이슈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충실하게 진행됨 ㅇ 스마트팜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하여 적절한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과제 추진계획이 원래 예정표대로 무난하게 진행됨 ㅇ 12건의 추진계획들이 제시되었고 일정에 따라 수행되었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제시된 지표들은 지난 년도들의 추세선을 일부 상향하는 지표로 상당히 도전적임 ㅇ 제시된 지표들의 지난2-3년 실적평균 대비 110% 이상의 높은 도전성을 보이고 있음 ㅇ 성과지표 1은 정성지표로 '초과달성'으로 판단되며, 성과지표 2, 3, 4는 '24년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법령제정 및 제도정비로 인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팜의 양적 확산, 데이터 활용 고도화,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다차원의 노력들이 인정되며 그에 따른 결과(outcome)와 성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스마트농업 육성법률 제정, 비농지 기반 수직농장의 허용,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토대 마련의 성과 큼 ㅇ 향후에도 적극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 사료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자체평가시 지적 사안에 대해 정책 개선 및 사업 방향의 구체화를 통하여 환류 이행을 성실히 함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들을 수용하여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 인정됨 ㅇ 자체평가 지적사항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함

2-2-2	농기자재종자 산업 육성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으로 무인자동화 농기계 실증하는 등 첨단 농기계 보급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미래농업 생산 체계 구축

- 무인자율 등 지능형 농기계 검정가준 마련으로 국산 농기계의 품질, 성능, 신뢰도를 제고하여 고품질 첨단 농기계 보급 촉진

○ 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을 경감하고 공동이용 확대 등 밭농업기계화율 제고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수 : ('23) 825천명 → ('24) 847천명
** 밭농업기계화율 : ('20) 61.9% → ('22) 63.3 → ('24P) 67.07

○ 디지털육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종자 R&D 추진 및 종자산업 기초 인프라 구축

- 디지털육종 등 육종기술 혁신 및 종자산업 기반 구축 지원으로 육종연한 단축 등 종자업체의 우수 종자 개발·보급 확대

* 디지털육종플랫폼 구축으로, 육종기간 단축(7~10년 → 3~5), 상품화율 향상(10% → 50), 단일형질 → 복합형질 동시 구현 등 기반 마련
** 컨설팅 실시 현황 : ('23) 16개 업체 29건 → ('24) 17개 업체 30건(추정)

○ 종자박람회 개최를 통해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동 지원 등으로 종자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확대 성과 창출

* 참가기업 91개社((`23) 89개社), 해외바이어 유치 83명(('23) 76명), B2B수출상담 324건(`23) 165건), 수출계약 24개社 81억원(`23) 31개社 76억원)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성과지표를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기계·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발굴 등 필요

- 종자산업은 수출 실적(수출액, 수출국 등)으로 성과지표 설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3	ㅇ 지게차 농업기계 포함 노력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수렴 노력이 평가됨 - 첨단농기계 보급 추진계획 등은 적절하게 판단되며. 첨단육종기반 마련과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필요 - 농기계·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발굴 등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다수의 정책이 관련기관, 정책간의 협업 하에서 추진됨 - 부처 외부인 타 부, 처, 청과의 협력 체계가 우수한 수준에서 적절히 이루어짐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성과지표 1, 2, 3, 4는 목표대비 실적 100% 이상 달성함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은 적극성이 낮으며, 임대 농기계 농업인 이용률, 육종기술 분석서비스 제공 업체수는 보통, 국제종자박람회 해외바이어 참여실적은 적극성이 높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	ㅇ 첨단 농기자재 및 농기계의 보급은 농업의 첨단 산업화에 중요하며 노지와 시설을 포함한 첨단 농산업의 육성은 중요함 -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대효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상위 목표에 우수한 수준에서 부합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3	ㅇ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에 있어 아직 보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해외 바이어 참여실적은 실질적인 성과를 계측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

2-2-3	농식품 혁신 R&D 추진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R&D 추진체계 개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혁신·도전적 농식품 R&D 투자 환경 조성**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식품 R&D 혁신방안 수립**('24.3.)으로 **체계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 TF 구성·운영**을 통한 **혁신방안 이행 및 실행력 제고**

- 농식품 R&D 사업의 **유사·중복 최소화 및 효율적 투자·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농진청 연구개발 공동기획단*' 출범**('24.7.)

* 기술분야별 7개 분과(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동물·질병, 첨단정밀농업, 생명자원·소재, 품종·재배, 기후·안전) 구성,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총 114인의 전문가로 구성

○ **(R&D 사업기획)** 국가 R&D 정책 및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미래 R&D 투자 분야 발굴·기획**

-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정책방향과 연계**한 임무 중심의 **농식품 R&D 사업기획 및 투자 기반 확보**

* 스마트농업(35,536백만원), 그린바이오(25,398), 푸드테크(40,880) 등 R&D 투자

-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 **다부처 협업 기반의** 개방형 R&D 발굴·기획으로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 사업명 :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 모델 개발사업('25~'28, '25년 6,750백만원)

○ **(R&D 사업 및 성과관리) 농식품 R&D 과제별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

- **농식품 R&D 사업설명회**를 통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현장 이해도 증진** 등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제고**

-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특허분석평가 시스템의 소개** 및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등 평가지표 **맞춤형 특허전략 수립 지원**(특허청 협업)

○ **(기술상용화 촉진) 농식품 R&D 성과(기술, 제품 등)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인증·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 컨설팅** 등 **혁신생태계 구축**

- 농식품 R&D 성과의 기술 인증을 통한 **공공 조달 시장진입 기반 조성** 및 **기술·제품의 신뢰도 제고로 농산업체 수익 창출** 확대

  *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매출 : ('22) 2,495백만원 → ('23) 3,721('24년 조사)

- 농식품 **R&D 혁신 기술 상용화 성과 공유로** 산업·연구 현장의 **체감도 증진**을 위한 **'농식품 R&D 테크비즈위크(10.28.~29.)'** 개최

  * 성과전시(34개社, 51개 부스), 심포지엄·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63개社, 104건) 연계

-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 등 부대행사 연계로 농식품 분야 **연구자 우수성과 창출 의욕 고취**(정부포상 8점, 장관표창 19점)

- **'농식품 R&D 코디네이터' 사업추진**을 통한 **기술개발·사업화 관련 전문 컨설팅 제공**으로 **시장 진출 등 사업화 성과 창출** 견인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연구개발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으로 추진됨에 따라 **단기에 확인 가능한 가시적인 정책효과는 다소 부족. 정책효과 확산**을 위해 이해관계자 외에도 **일반 국민 체감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일반 국민이 쉽게 농식품 과학기술 성과를 접할 수 있는 관련 행사 개최 검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식품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 등 모니터링**(연중) 추진 및 **'공동기획단'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25.12.)

○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개최**('25.12.)를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농식품 R&D 성과 전시·확산 추진**(농식품부·농진청 공동 개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 **(계획수립의 충실성)** 농식품 산업 종사자, 연구자, 기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 이를 적절히 반영함 - 특히, 농식품 R&D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개선 요구에 대해 기획·관리·확산체계 개편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 ○ **(성과지표의 적절성)** 관리과제의 특성을 고려, 대표성을 보유한 지표로 설정해, 정책 추진성과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지표달성의 도전성을 확보함 -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로서 정책수혜자가 산업 현장에서 그 영향력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 **(일정관리의 충실성)** 성과관리계획에 따른 과제별 추진계획 12건 완수 ○ **(관련기관 협업 노력)** 과기부, 산업부, 농진청 등 타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 **(성과지표의 달성도)** 도출한 3개 지표 모두 최근 3개년 평균치 대비 110% 상향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수준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 **(정책 효과 달성 기여도)** 농식품 R&D 추진체계 개편 및 적극적인 미래 R&D 투자분야 발굴을 통해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 농식품 산업현장에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정책효과 발생정도가 우수함 - 다만,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한바, 농업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창출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농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및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달성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상위/전략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정책환류 노력도)** 전년도 주요 정책평가 및 국회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개선 및 환류 이행 노력이 적절히 추진됨 - 특히, 농식품 R&D 유사·중복 및 비효율성 개선 등 외부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정책환류 노력이 우수함

2-3-1	미래식품산업 육성 및 활력 제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푸드테크 산업 육성)** 푸드테크 법적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 (법·제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푸드테크 산업 성장에 맞춰 체계적인 육성 가능(12.20, 제정)
- (인프라) 실증시설을 구축(3개소)하여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식품기업 스마트공장 도입(30개사)으로 생산성 및 품질 제고

○ **(식품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식품 R&D, 기술거래 이전 지원 등을 통해 식품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우수사례 발굴

- (R&D) 식품 R&D 지원을 통한 출연금 10억원 당 5년간 사업화 평균 건수는 이전 기간 대비 2.8% 증가 * ('18~'22) 9.99건 → ('19~'23) 10.27건
- (기술거래이전지원) 민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식품기업의 후속 성장을 지원하여 식품분야 기술이전 계약 95건 체결

○ **(국산 농산물 사용확대 및 중소식품산업 육성)** 식품기업과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농업계 소득과 식품업계 안정적 원료 수급 달성

-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여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24, 137건 : 단체 75, 기업 62)
-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기업** 대상 **신제품 개발, 시장조사·마케팅, 원료 운송·저장** 등 지원(기업당 20백만원 이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중기부 등과 협업 등 범부처 협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기부 등 타부처와 회의·간담회를 통해 협업을 논의하고 미래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 추진

- 수출 유망기업 등에 **민관협력형 스마트공장**('25, 약 70개소 예정)을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삼성·농협, 농식품부 협업)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푸드테크산업발전협의회, 분야별 간담회, 현장방문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 개선 ㅇ 성과지표는 대부분 국민체감도와 외부변수 영향력이 높고, 전문역량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분기별(월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ㅇ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부·삼성·농협 등과 협업으로 식품기업 자동화 장비 도입 체결, 분야별 현장밀착 과제 발굴, 식품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부·산업부·농진청 공동 추진으로 기술과제 도출, 기술이전 기반 확대 등의 협업 성과 '우수'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3	ㅇ 성과 목표는 과거 실적 대비 적극성(110%이상)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24년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푸드테크법적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시설 구축, 스마트공장도입 지원, 식품박람회 개최, 수출지원 등으로 수출과 국내원료 구입액 성장 효과 발생 ㅇ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술 경쟁력 강화,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은 향후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등 정책 개선 및 환류 이행을 위해 노력함 - 언론보도 대응으로 보도자료(16건) 및 보도설명자료 배포(8건)를 통해 국민들에게 물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한 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3-2	한식 및 외식산업 진흥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식) 한식 가치의 글로벌 확산 및 산업 확장 기반 마련**

- 국제적으로 높아진 K-푸드 위상을 내수·관광·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발표**(2.2)

* (주요내용) ①인프라 강화(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다양화), ②가치 제고(브랜드가치 확산, 글로벌 미식 네트워킹 강화), ③산업 생태계 확장(한식당 경쟁력 제고, 농업·관광·수출 연계 등)

- **'장담그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12.5)

* 유네스코 등재 위한 민관 추진 위원회 구성, 관련 DB 구축 및 신청서 작성, 장 문화 국제학술포럼·전시회 개최 등 유네스코 등재 분위기 조성('20~'24, '22.3월 신청서 제출)

- **국제미식행사**(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국내 개최(3월), 국제행사 연계* 한식 홍보,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10월) 등 한식 가치 확산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연계 한식 홍보관·체험행사 운영(1.19~2.1), 2024 파리 올림픽 계기 한식 체험·홍보행사 운영 및 현지 한식당 홍보(7.25~8.11)

-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으로 **한식 연구 기반 조성** 및 김치 원료의 **안정적 조달시스템** 구축**

* 지역별 특색있는 향토음식의 체계적 발굴·복원·연구 및 대중화·산업화 위한 거점 역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기획('24.10월~), '25년도 예산 확충('24. 5.5억 → '25. 46억)

** 대규모 배추 저온저장시설 및 절임생산시설 3개소 조성(충북 괴산, 전남 해남, 신규전북 고창)

- **해외 한식당 품질강화*** 지원 및 **한식 컨텐츠 강화****

* ①해외 한식당 협의체 신규 선정(15개국 26개 → 18개국 29개, 스페인 바르셀로나·캄보디아 프놈펜·미얀마 양곤) 및 협의체 대상 경영컨설팅 제공,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등 품질개선 지원
②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확대(기존뉴욕·파리·도쿄, 추가런던, 13→16개소)

** 소멸해가는 향토·지역음식(강원, 충북지역) 구술·채록 및 콘텐츠 구축·제작 등

○ **(외식) 외식업 구조개선 지원 및 경영지원을 통한 물가 안정 도모**

-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음식점업 비전문취업**(E-9) **첫 도입**('24.1~) 및 상반기 시범사업 후 **요건 완화***로 제도 활성화

* (기존) 업종한식, 지역주요 100개 지역, 업력5~7년이상 → (변경) 한식+외국식, 전국, 5년이상

- **외식업계 소통 협의체 구축, 외식 물가 안정 협조**를 위한 환경 조성 및 현안 적극 대응의 결과 **외식 물가 안정적 추세**

* ▲식품 원재료 37개(신규 7, 기존 4, 연장 26), 농산물 14개(신규 1, 기존 2, 연장 11) 품목 할당관세 적용
▲외식업체육성자금('23: 150억원 → '24: 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3: 2억원 → '24: 8억원)
(성과) 외식물가 상승률 안정세(%) : ('22.9) 9.0<고점> → ('23.1) 7.7 → ('24.1) 4.3 → ('24.9) 2.6

-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대구 대구로, 세종 땡겨요, 공주 휘파람) 위해 **음식점 입점 확대 추진** 및 **홍보·프로모션** 등 진행

* **(성과)** 대구 **대구로** 회원수 5.1%↑ 가맹점수 5.9%↑, 세종 **땡겨요** 회원수 72.6%↑ 가맹점수 63.5%↑, 공주 **휘파람** 회원수 0.9%↑ 가맹점수 8.2%↑

- **과도한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출범(7.23), 상생안 도출* 등 **배달시장 구조개선**

* ❶수수료 인하 합의(현행 9.8% → 개선 매출액별 2~7.8% 차등 부여), ❷입점업체 부담항목 영수증 표기,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 최혜대우 요구중단 등 외식업체 요구사항에 대한 자율규제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한식 및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실행력 제고와 성과확산 필요**

- 아울러, **물가안정의 기여**는 **인건비**나 **물가** 등 **외부환경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성과지표 설정에 반영** 검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한식 및 외식산업 성장**에 따른 **국산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 발전 성과도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 수립**

○ **민간 부문**의 **혁신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 협의체, 간담회, 현장장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하여 정책 및 사업 적극 반영 ○ 한식 산업생태계 확장과 외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기별, 월별 일정을 적절히 수립함 ○ 정책내용을 직접적 성과측정 가능, 대표성이 탁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 관계부처, 민간기업과의 협의체 등 협업을 통해 규제 완화, 세제 해택 등 추진 실적이 우수함 - <한식산업발전협의체>, <김치산업발전협의체>, <전통주 산업진흥협의체> 등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협의체 구축하고 규제 완화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협업 실적 다수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 성과목표의 목표치 달성은 3개 지표 모두 달성 - (성과지표1) 외식업 매출액 : 달성률 109.5% - (성과지표2) 한식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수 : 달성률 103.1% - (성과지표3) 공동구매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 구입액 : 달성률 124.1%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 한식 및 외식산업이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상위목표인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민경제 활성화' 달성에 상당정도 기여 ○ 한식·외식 산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소통을 통한 규제 완화·구조 개선,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전방위적 지원 추진 -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세법 개정,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 추진실직이 탁월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주요정책평가, 국회, 산업현장, 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개선 및 환류 이행 - 외식에 대한 지원이 국내 농업과의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다 강화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책개선 활동을 적절히 추진함

2-3-3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4년 농식품 수출액(잠정)은 99.8억불로 전년 대비 9.0% 증가

* 5년간 수출실적(억불) : (’20) 75.6 → (’21) 85.6 → (’22) 88.9 → (’23) 91.5 → (`24) 99.8

- 물류비 지원 폐지, 중동 사태, 환율 변동 등 부정적 여건에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여 우수한 정책 효과 창출

- 주요 전략 품목 수출 역대 최대치 경신, 중동·중남미·인도 등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영토 확장

* 10대 전략품목 중 6개(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김치, 포도) 최대 실적

** 농식품 수출 시장: (`23) 199개국 → (`24) 207

○ 범부처 협의체를 신설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

- 민·관 합동 협의체인 수출확대 추진본부 및 현장방문을 통해 수출기업과 소통하고 상담창구인 수출정보데스크를 통해 애로 해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가 수출 성과의 대표성이 있으나 3개 성과지표 간 중복 발생

○ 근래의 수출 성과에 비해 성과 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

- ‘24년도 성과 목표는 3개 지표 모두 과거 3년치 평균의 110%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23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과소하게 평가됨

* 관리과제 평가지표 상 '목표치의 적극성이 높음'에 해당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간 중복 제거를 위해 성과지표를 추가 검토하여 보완 필요

○ 최근 성장세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 설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수출기업·유관기관·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수출혁신전략을 수립하고 보완하였음 - 기간별로 구체적으로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전반적으로 탁월하며, 국민체감도와 외부변수 영향력도 매우 높게 평가함 - 수출액 기준으로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여 성장률 및 금액을 파악 가능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과제 추진 우수 ㅇ 다양한 주체와 협업하여 실적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 * 농식품부 중심의 범부처 협의체 구성, 특허청 사업을 통해 지적재산권 실태조사, 재외공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소비 분위기 조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 * `24 다변화 최우선 전략국 수출액(높음), `24 10대 전략 품목 수출액(높음), `24 농식품 수출액(높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정책효과 발생은 탁월한 것으로 평가 - 수출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측면이 있으나, 수출선 다변화, 전략품목 선정 등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만한 정책과제로 적절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전략품목 선정 시 농산물을 다수 포함시킨 것도 적절 ㅇ 향후 기대효과 및 상위 목표(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달성도 우수로 평가 - 다변화 전략국, 전략 품목 등은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판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자체평가 및 국회 의견에 대한 환류 이행 우수

2-3-4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주건수 확대)** 스마트팜 **수주 건수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11건→13건]

- 주요 수주 대상국은 **호주·쿠바·사우디·미국 등**이며, '23년도에 수주 대상국에 없던 **신규 진출국가*** **증가**

* ('24년 신규 진출국) 스리랑카, 폴란드, 키르기스스탄, 태국 등 신규 진출

- 현지 인프라 지원(전담직원 매칭),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해외 바이어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컨소시엄 프로젝트 수주지원사업('24년 신규 4개소)

○ **(G2G 협력 강화) 왕정 중심 산업생태계**인 중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스마트팜 수출기업 진출 기반** 구축

-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 MOU 개정('23.10.25) 이행사항 구체화를 위해 실무급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협력·투자 유치** 등 협력 구체화

* 제1차 한-스마트팜 협력위원회 개최(2.22, 국장급), 카타르 경제실무단 방한(5.27)

- 한-카타르 농업기술 연구기관 간 한국산 **스마트팜 기자재에 대한 사막기후 실증* 착수**, 우리기업 중동 수출기반 구축('24.10월~'25.10월)

* 한국농진청-카타르하사드푸드 간 100평 온실 4동 규모에서 내서성종자·농업용필름 등 실증

○ **(협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팜·건설업계 해외 동반진출** 확대 촉진 및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한 **농산업 수출기업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

- 설계단계부터 **스마트팜·건설 업계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개발형 수주 등 효과 창출 기대, **업계 글로벌경쟁력 강화 도모**

- 농산업분야 수출기업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우대 적용으로 무역보험 가입비용 절감, **수출기업 재정부담 및 무역리스크 경감***

* 제도 시행 후, 총 505건 수출 기업 우대, 4천7백만원 이상 절감

- **농산업분야** 중소수출기업 **45개社**를 **수출바우처** 대상으로 **우선 선정,** 수출에 필요한 디자인개발·국제운송료 등 기업별 최대 1억원 지원

○ **(수출거점 조성) 시범온실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수출 거점으로 활용**

- 카자흐스탄·베트남('22. 준공), **호주('**24.9.준공) 및 **사우디**('24.3. 부지확정), **캐나다**('24.8. 신규 선정) **시범온실 조성·활용**을 통한 **수출 활성화**

○ **(수출 법률리스크 해소)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우리 기업이 **계약 체결 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지원

-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발간) 턴키식 패키지 수주**와 **기자재 수출**로 구분되는 스마트팜 수출 특성을 **반영**하여 **총 4종**(2종 x 한·영 2개 국어) **발간**('24.8월)

- **(법률컨설팅 지원) 수출·수주**의 **'양'과 '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 연 **총 1억 규모**의 **법률컨설팅 추진**

○ **(글로벌 시장 개척)** 스마트팜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로드쇼 확대 개최**('23년 2회 → '24년 4회)

- K-스마트팜의 **기술력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기회 제공 및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미달성)** 전후방산업 수출 실적 목표가 3,091백만달러였으나, 대내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3,011.5백만달러(97.4%) 달성

- 특히, 농산업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농기계는 북미시장의 하비파머(Hobby Farmer: 취미농) 증가세 둔화와 높은 금리로 인해 중소형 트랙터 수출액이 대폭 감소(전년 대비 21.4% 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목표 달성)** 대내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나, 기업 지원 확대와 해외 실증지원 등을 통해 목표 달성

- **(기업 지원)** K-스마트팜 로드쇼 확대 개최('24:4회→'25:6), 수출 컨설팅 범위 확대, 컨소시엄 수주지원 지원 개소 증대('24:4개→'25:5~6)

- **(해외실증 지원**'25년 신규**)** 수출 논의가 진전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현지 실증 스마트팜 구축 지원**

* (지원 개소수) 6개소잠정,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1억원(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상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성과관리기본계획상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이 충실히 시행되었고, 사업 추진계획에 잘 반영 ㅇ 지표의 국민체감 및 외부 변수는 매우 높음, 전문성은 높음으로 판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업체계 구축 및 소통 강화, 관계기관, 유관협회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 추진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성과지표에 대한 적극성 높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대외 여건이 어렵고, 세계경제 불활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국내 전후방산업의 수출 증대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는 커질 것으로 판단 ㅇ 향후에도 관련 산업 및 기업의 시장 확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 경제적 효과 증대 ㅇ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상위 목표 기여 정도가 클 것임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자체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수행되었음 ㅇ 보조사업 연장평가, 언론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처 등 정책 개선 및 환류 이행을 위해 노력함

2-3-5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도기반마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체계적 추진 가능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3.12.8), 공포('24.1.2), 시행('25.1.3) 시행령·시행규칙 공포('24.12.31, '25.1.3) 및 시행('25.1.3)

○ (**산업화 촉진**)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지역별 거점시설** 구축 및 그린바이오 벤처 창업 촉진을 위한 전문시설 조성

- (거점시설)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시설** 구축

  * 곤충산업거점단지 1개소(남원), 천연물 소재 허브 1개소(제천) 추가 구축

- (창업지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네트워킹 공간, 창업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전문시설*(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 누적 5개소 조성 : ('21) 익산, ('22) 포항, 평창, ('23) 진주, ('24) 예산

○ (**산업지원**)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상용화 지원) 그린바이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인허가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마케팅** 지원을 통해 산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 13개社×50백만원 / (수출지원) 15개社×80백만원

-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ICT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동화·고속화·표준화 시설** 도입 추진

  * 2개소(미생물 분야) 전북 정읍, (동물용백신) 경북 포항 구축 중

- (산업화시설) 그린바이오 산업 **소재**(기능성식품·화장품 등)의 **표준화** 및 **원료공급**을 위한 **첨단농장** 형태의 산업화시설 구축(경북 고령)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그린바이오 전 분야 반영하는 지표 개발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그린바이오 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개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3	ㅇ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후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잘 실시하고 의견 반영에 노력하고 있음 -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추가조성, 소재산업화, 기업지원 등 실질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여 정책반영을 잘하고 있음 ㅇ 현재 지표도 의미가 있지만, 6대 분야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표개발이 필요함 * 현재 지표: ①농업미생물제재 수출액, ②기능성 식품 특허·개별인정 등록 건수, ③생명자원정보서비스 DB구축 건수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추진계획들이 일정을 준수하여 따라 집행됨 ㅇ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부처간 협업노력이 인정됨 -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 분야별 분과위 및 지역별 기업간담회 운영으로 규제개선 노력 -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한 정부부처 내 체계적 협업 - 벤처·창업기업 전문 보육기관 협의회 운영 등 협업 노력 인정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성과지표 모두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함 ㅇ 성과지표 모두 달성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	ㅇ 전체적인 기반마련, 생태계 조성, 산업화지원 시스템 및 법령이 구축되어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함 - 특히 창업지원, 창업성장을 돕는 노력과 성과가 돋보임 ㅇ 아직 초기단계로 기업체 수, 역량 강화 등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3	ㅇ 재정사업자율평가, 국회지적사항 등에 대해 적절히 개선하여 환류이행이 잘되었음

2-3-6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기업 공장 착공, 식품기업 R&D 기술 지원, 개방형 장비 공동활용 지원, 인력매칭 지원 등을 통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활성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기업 대비 착공기업 수는 최근 3년간 평균(9개 기업) 대비 11.1% 상향한 10개 기업으로 설정하여 입주기업 체계적인 관리 강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식품기업 R&D 성과 도출 기업 수는 최근 3개년 평균(75개 기업) 대비 10.6% 상향한 83개 기업으로 설정하여 식품기업 경쟁력 제고
- 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한 개방형 장비 공동활용 건수는 최근 3개년 평균(11,234건) 대비 10.1% 상향한 12,374건으로 설정하여 기술애로 해소 지원
- 클러스터의 인력매칭 지원을 통한 식품기업 채용인원 수는 최근 2개년 평균(111명) 대비 10.8% 상향한 123명으로 설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맞춤형 기술지원) 식품포장개선, 품질·기호도개선, 공정개선, 기능성식품개발, 시제품 개발 등 기업수요별 특화 기술개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평가결과) '24년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투입대비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수정이 필요

- (원인분석)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기업의 매출·고용·수출실적은 '24년도 실적이 '25년도 5월경에 통계자료로 집계·발표되어 평가보고서의 평가 시기와 시차가 발생하여 성과지표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선필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세부추진계획간 연계 강화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및 준공기업 확대를 위한 지속 노력 필요

- (보완사항) '25년 사업추진 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입주지원회의·소통간담회·경영자문·기술지도 등을 통해 입주·준공 기업 확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 입주기업,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세부추진계획에 식품산업공동위원회, 입주기업 소통혁신 간담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기관 협의회 등의 현장 의견 반영 ○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연계된 세부적인 분기별·월별 계획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함 -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과제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제시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 성과관리 시행계획 과제를 충실히 이행 - 성과관리 시행계획 총 22건 대비 22건 모두 완수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정책 추진 - 클러스터 조성*, 규제개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 농식품부, 전북도, 익산시, 산단공, LH, 식품진흥원 **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전북도, 익산시, 산단공, LH, 식품진흥원 *** 식품진흥원, 농금원, 농진원, 농기평, aT, 코트라 -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2단계 수요발굴을 위한 대응협의(4회), 농식품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투자유치 로드쇼(1회), 일자리 유관기관간 일자리채용한마당(1회),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KOTRA 해외무역관 전시·홍보(1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 '24년 관리과제 성과지표(4개) 모두 10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의 적극성 또한 높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 식품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및 성과확산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함 ○ 전방위적으로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종합적인 성과(입주기업의 매출액 변화 등)도 검토가 필요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자체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 등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류이행하는 정책개선 노력이 우수함

2-4-1	친환경농업 육성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생산 기반)**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과 함께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집적지구**를 **조성**('24년 누적 51개소)하고,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

- 농업인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2회)하고, 농업 현실을 반영하여 **직불 단가 인상안 마련**

- 집적지구 소속 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한 전속 출하(출하량의 80% 이상 의무), 사업주체는 생산관리 및 마케팅을 총괄하여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지원**

- 고령화되는 친환경농업계에 청년농 유입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시 **청년농**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친환경 임업인**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통·소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 분야 소비기반 확대**

- ①**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에 **'친환경농산물' 평가 배점** 반영, ②**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 마련**

- 전량 군급식으로 활용되는 **친환경쌀 공공비축 매입량**을 **확대**(**5~7천톤 → 1만톤**)하고 및 **등급별 기준**과 **매입단가 신설**(식량국 협조)

○ **(제도 개선)**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 농식품부, 농관원,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실무협의체를 구성('24.2월~)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과정중심 인증제도 개선('23년) 이후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

○ **(가치 확산)** 친환경자조금지원사업, 전국단위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의 **공익적 가치 확산**

- 유기데이(62day) 기념행사를 개최(6.1., 서울 청계광장)하여 소비자와 농업인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의지 표명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강력한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확대**에 **한계**

- 기후 변화 심화,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한계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 변화한 농업 여건,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애로사항 및 국회,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함 ○ 친환경농업 육성 과제 성과측정에 적합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지표로 적절히 선정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 사전에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과제를 적기에 완수함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생산자 및 타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 - 환경부·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 (지표 1)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전체 경지면적 대비 인증면적 비중)' 달성률 93.1%(p) ○ (지표 2) '환경가치를 고려한 친환경농식품 구매 비율' 달성률 111.0%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확대 실현에 기여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국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개선 실시

2-4-2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 초과 달성(1,715호, 목표 대비 100.2%) 및 유통업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인증 대상 축종을 한우→돼지, 젖소로 추가하고, 지정 목표 초과 달성(190호, 목표 대비 126%) 달성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 방식 다각화를 위한 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을 최초 체결 (5.31)

○ (**가축분뇨 규제개선**) 민간 에너지화시설 기술인력 규제 완화(1~2명)로 농촌지역 내 투자 활성화 및 인건비 절감 효과 창출(연간 150억↓)

- 로터리 규제 완화로 가축분뇨 액비 이용처를 벼, 사료작물 → 과수원, 시설원예 등으로 확대, 화학비료 절감 효과 창출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7.30),「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12.13)

○ (**가축분뇨 이용 다변화**) 환경부·농협·발전소(남부발전) 협업 통한 시험연소 성공, 가축분 고체연료의 대규모 이용처 신규 발굴

* '30년까지 승용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 및 녹조유해물질 감축 효과 창출

○ (**축산악취 개선**)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축사내부 암모니아 평균농도 54.7% 감소, 축사 유형별 적정 악취저감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축산악취문제 근본 해결 확산

○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축산업의 구조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세부전략인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1.29) 하고 이행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미흡 의견) 환경,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생산자 수익감소, 소비자 비선호 우려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원인 및 사유**) 한우 사육기간이 줄어들면서 한우 근내지방

(마블링)이 하락하며 두당 판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 (경제성) 관행 방식을 지양하는 사양관리·환경개선을 통한 사육 효율화, 조기출하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효과로 축산농가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고창 중우농장: 평균대비 출하월령 7개월 단축, 1+등급 출현율 9.5% 상승, 마리당 생산비 136만원 절감

- (선호도) 탄소배출, 웰빙 등으로 과도한 마블링(지방)은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소비자도 환경친화적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도 상승

* 소비자 만족도 조사(11.28~12.4) 결과 저탄소 인증 축산물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소비자 의견이 '23년 77.0%에서 '24년 92.7%로 큰 폭 상승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가 경제성 제고 및 소비자 선호도 개선 위해 학교급식과 연계 등 소비층 맞춤형 유통경로 다변화 및 인식 개선 홍보 추진('25)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 정책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되며, 연중 의견수렴한 내용도 정책에 반영 ㅇ 수치로 판별할 수 있는 깨끗한 농장 조성(호)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수는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ㅇ 성과관리시행계획 대비 '완수' 12건, '거의 완수' 4건, '일부 완수' 2건 추진(1차평가 기준) * 2차 평가시 결과보고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ㅇ 본 사업은 환경부 등 타부서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 보고서는 다양한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에 대해 많은 협업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 성과지표 1 적극성 : 높음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대비 '24년 목표치는 110% 이상으로, 목표치의 적극성은 높음 ○ 성과지표 2 적극성 : 높음 - 전년 실적 대비 '24년 목표치는 110% 이상으로, 목표치의 적극성은 높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과제수행 노력에 따라 의도되었던 가시적 성과와 그에 따른 효과들이 잘 제시되었음 ㅇ 축산업 전반의 환경 개선은 우리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 산업적 가치 제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ㅇ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라는 전략목표와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의 성과목표와 잘 연계되어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자체평가시 지적 사안에 대해 정책 개선 및 사업 방향의 구체화를 통하여 환류 이행을 성실히 함 ㅇ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개선과 환류이행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ㅇ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적용하는 등 구체적 환류 노력이 인정됨

2-4-3	농업·농촌 탄소중립·기후대응·에너지 전환 역량강화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 탄소중립 순환체계 구축

- 저탄소 영농활동과 직불금을 연계하는「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신규 도입 및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저탄소 농산물 인증제」확대

○ 기후위기 적응 농업환경 기반 구축으로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체계 구축으로 농업 현장 및 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 지원

○ 농업·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천 및 농가소득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조성

- 농업기반시설 활용 재생에너지 시설 지속 보급,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도입을 통해 농지보전·농가소득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제공되는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정보들이 유관기관별 분산 관리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 애로 발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관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는 농업·농촌, 임업·산림, 농업용수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포럼, 검토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 등 과정에 적극 활용함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과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별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월별 세부 추진계획을 적절히 수립함 ㅇ 성과지표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실천 과제 중심이며,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임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ㅇ 성과관리 계획상 과제별 추진계획을 대부분 준수하여 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였음 ㅇ 탄소중립, 기후대응,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지표 1 적극성 및 달성도 : 높음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보다 '24년 목표치는 126%로 높게 설정되어 목표치의 적극성 "높음" - 목표치 대비 달성률 101.0%로 성과지표 달성도 "높음" ㅇ 지표 2 적극성 및 달성도 : 높음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보다 '24년 목표치는 110%로 높게 설정되어 목표치의 적극성 "높음" - 목표치 대비 달성률 100.4%로 성과지표 달성도 "높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계획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농업인 참여 확대, 저탄소 농산물 소비 등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 효과도 존재하는 등 현장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ㅇ「국가의 탄소중립」,「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조로의 전환」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환경·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전년도 자체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개선과 환류이행이 적극적이고 명확히 이루어졌으며 현장의견 반영도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등 환류 이행노력이 우수

2-5-1	방역체계 고도화 및 민관 협업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축전염병 최소화)** 농가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방역 수칙 준수 유도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 이동제한 명령 협조 농가에 소득안정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전실 재분류를 통한 건폐율 미적용 등

○ **(피해 최소화)**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기관 간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 방역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축산물 수급 체계 안정적 유지***

* 계란(30구) 가격 : (`20.12~`21.3) 6,828원 → (`23.12~`24.3) 6,311원(△7.6%)

○ **(전화예찰 체계 고도화)** 자가진단 알림톡 확대 도입 및 인공지능 보이스봇 시범 도입으로 **감염축 조기 발견*, 자율방역 의식 제고****

* 자가진단 알림톡을 통한 특이증상 개체 확인 → ASF 확진 및 초동방역으로 확산 차단

** 자가진단 알림톡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생농가 미흡사항 등 교육·홍보

○ **(정책 신뢰도 제고)** 국내 언론·전문가·농가와 국제기구(세계동물보건기구)는 럼피스킨 조기 안정화 등 우리의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

* 전문가 기고(`24.3),국제기구 사무총장 면담(`24.5), 다큐멘터리 방송(`24.7) 등

○ **(미래 비전 제시)** 「**중장기('25~'29) 가축방역 발전 대책***」 수립

* 민간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소모성질병 대응 강화, 인프라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4년 성과지표인 '방역체계 고도화 관련 제도 개선 실적'의 규제별 영향력을 차별화하거나 결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역 정책의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다각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과제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 특히 제도, 예산·사업, 지원시스템, 대책이 연계되어 작성된 분야별·분기별 추진계획이 돋보임 ㅇ 성과지표의 국민체감도, 외부변수 영향력 등이 매우 높으며, 정책내용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 - 다만, 제도개선 실적은 규제의 영향력이 균질하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차별화 또는 결과지표로의 개선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통한 관련기관 간 협조, 관련 정책과의 연계, 국제기구(세계동물보건기구) 및 민간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2개의 성과지표 모두 달성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가축방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인정되며, 의도한 정책성과가 탁월하게 발생함 ㅇ 국정과제 등 상위 목표의 달성도는 '탁월'하며, 향후 대내외적으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국회, 언론, 정책 평가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조치가 우수하며 환류 이행을 충실히 한 것으로 판단

2-5-2	중·대가축 방역관리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제적 피해 최소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방역제도 개선·마련과 위험도에 기반한 효율적 방역조치를 통해, 전년 대비 중·대가축 전염병 발생의 현저한 감소* 및 축산업계 피해 등 최소화

* 중·대가축 1종 가축전염병 발생건수 : ('21) 5건 → ('22) 7건 → **('23) 128건 → ('24) 34건**

- 살처분 범위 결정 시 질병별 전파 특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적용, 살처분 보상금 예산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축산물 가격 안정화 등) 제고

* 살처분 예산 : ('21년) 195,344백만원 → ('22년) 74,389 → **('23년) 120,064** → **('24년) 78,788**

○ **(축산물 수급안정)**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살처분 최소화로 국내 돼지고기 및 쇠고기 수급 안정 달성

- ASF 권역화 조치를 통해 전국 확산을 차단(경기·강원·경북에 국한)하고, 구제역 비발생을 유지하는 등의 성과로, 살처분을 최소화('24년 국내 돼지·소 사육의 0.36%, 0.01% 살처분)하여 안정적인 수급 상황 유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적극적인 방역관리를 통해 달성한 정책적 효과(발생 감소 및 살처분 최소화, 재정소요 절감, 축산물 수급안정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대가축 방역관리 강화와 관련한 정책 의사결정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한 것임을 강조하고, 정책적 효과 및 가치를 분석하여 대국민 홍보 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양상과 변화에 맞추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음 ㅇ 제도 개선 및 백신접종관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ㅇ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이며 신뢰성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과제 추진계획이 원래 예정대로 무난하게 진행됨 ㅇ 지자체 등 다양한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함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행안부, 환경부, 국방부 등) *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검역본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 특별방역상황실, 가축방역심의회 구성·운영 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3	ㅇ 효과적인 방역정책 추진으로 다수의 관계자들이 정책효과를 느낄 수 있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임 ㅇ 성과지표 1은 목표량의 100% 이상, 지표 2는 90% 달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적극적인 방역관리로 중대가축 감염병 발병이 감소한 측면이 존재하고, 살처분 최소화, 효율적 방역조치로 재정소요 절감, 산업과 방역의 균형 추구,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의 정책효과도 유의미함 ㅇ 가축질병 위험도의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도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음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지적 사안에 대해 정책 개선 및 사업 방향의 구체화를 통하여 환류 이행을 성실히 하였고, 국회, 언론이 제기한 이슈들에도 적극 대응한 것으로 평가

2-5-3	AI 방역관리 강화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금 발생 및 살처분 최소화, 계란價 안정**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금농가**의 **능동적인 방역역량 강화**로 **AI 예방 기능 강화**

- **(발생 감소)** 선제적인 방역 조치 등을 통한 **AI 발생건수 최소화**

* '08년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즌 중 '17/'18년(22건) 제외 시 가장 작은 AI 발생건수(32건) 기록

- **(살처분 감소)**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여 **'08년 이후**(최근 15년간) **가장 적은 살처분 규모**

* 살처분 시 계란 재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란계의 살처분 규모도 267만수로 '14년 이후(최근 10년 내) 최소 규모

- **(계란價) 산란계 살처분 최소화** 및 **안정적 계란 공급**으로 **계란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일일 공급량 : ('20.12.~'21.3월) 3,982만개 → ('22.12.~'23.3월) 4,681 → ('23.12.~'24.3월) 4,800

** 소비자가격(30구) : ('20.12.~'21.3월) 6,828원 → ('22.12.~'23.3월) 6,476원 → ('23.12.~'24.3월) 6,311원(2.5%↓)

- **(닭고기價) 육계 발생***은 **과거보다 감소**함에 따라 **공급이 증가****(전년대비 5.5%↑)하여 소비자 가격***은 **안정세** 유지

* 육계 발생 : ('20/21) 2건 665만수 살처분 → ('22/23) 4건 143만수 → ('23/24) 0건 8만수

** 도축마릿수(10~2월, 만마리) : ('21/'22) 33,007 → ('22/'23) 31,181 → ('23/'24) 32,887(5.5%↑)

*** 소비자가격(1~3월, 원/kg) : ('22) 5,520 → ('23) 5,908 → ('24) 5,758(2.5%↓)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 지표 중 살처분 가금 수는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실적 증빙 파악이 어려움

○ 농가 자체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유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 증빙자료의 홈페이지 공개 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한 출처 명확화

○ 농가의 능동적인 방역 체계 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및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 성과관리기본계획 상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이 충실히 시행되었고, 사업 추진계획에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는 고병원성 AI 발생건수(하향지표), 살처분 가금 수(하향지표), 예방적 살처분 제도 개선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성과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 일부 추진일정(3건)의 경우, 알림 혹은 계획 공문으로 사업의 적시 추진 여부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진 계획이 준수하게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 관계기관 협의회, 관계기관 의견 수렴, 환경부의 의견 조회, 민관협업 회의 등을 추진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 AI 발생건수, 살처분 규모 등에서 '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여 계획 수립시 기대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은 시기적으로 평가 시점 이후가 본격화되므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추후 발생 정도와 대응에 대한 자료 추가 제출 시 수정 평가 가능.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전년도 주요 정책평가,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을 반영함

3-1-1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인 삶의질 향상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촌소멸대응 특별지수 개발**

- 농촌소멸대응 특별지수(안) 개발('24.4) 이후 지수 산정 등 법제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발의(이만희의원, '24.8.30)되어 **2024년 목표**(개정안 국회 제출) **달성**

○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24.3.28, 비상경제장관회의)

-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농촌 소멸**을 **방지**할 특단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촌소멸 지속**

- **농촌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농촌소멸대응 추진 전략** 등의 정책 효과는 초기 단계로 향후 기대효과에 의존하는 면이 있어 중앙-지방협력 등 **현장 체감력** 있는 **과제 도출**과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촌소멸대응 지속 추진**

- 농촌소멸위험지역 지정의 근거가 될 **농촌소멸위험지수 개발**과 이를 근거로 한 농촌소멸 대응 정책 추진으로 향후 **농촌 활성화** 및 **도·농 격차 해소, 농촌 발전** 등 **농촌 소멸 대응 추진**

○ **농촌 정주 만족도 개선 지속 추진**

- 변화된 정책환경에 기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25~'29) **수립** 및 **추진**으로 **농촌 정주 만족도 개선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농업인 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간담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함.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소멸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산림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 ㅇ 삶의질 위원회 운영. 소멸대응 관련 다관계부처 협의 등 시행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2개 지표 모두 적극성은 높음으로 판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최초 농촌소멸 대응 정책 수립, 체류형 쉼터, 농촌관광 활성화, 촘촘한 돌봄 서비스 구축, 농촌 정주여건 개선 ㅇ 법제화 및 지수 발표 이후 농촌 소멸위험 지역별 맞춤형 대응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주만족도는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됨 ㅇ 농촌소멸위험지수 법제화와 정주 만족도 조사는 농촌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명확히 기여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농촌소멸 대응 특별지수 개발 등 자체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 개선 ㅇ 농촌소멸위험지수 법제화 및 범부처 협력 체계는 외부 지적사항과 전년도 자체평가 의견을 일부 반영한 사례로 우수한 개선 조치로 판단

3-1-2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지원체계 구축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본방침**)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농촌공간 기본방침** 수립·발표(4월)

- 농촌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구상,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 청사진 마련

*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①농촌공간 재구조화, ②주거·정주, ③생활서비스, ④경제·일자리, ⑤경관·환경, ⑥공동체·활력 등 6대 추진방향 제시

○ (**추진체계**) **중앙·광역 단위 정책지원기관**을 **지정**(5~10월)하여 관련 조사·연구, 시·군 컨설팅 등 전문 지원체계 마련

* (중앙)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광역) 8개 도(道)

○ (**지자체 지원**) **139개 농촌 시·군**의 원활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하여 작성 용이성 제고

- **5개 시·군**(순창, 나주, 신안, 부여, 당진)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계획 수립**, 다른 시·군이 참고할 수 있는 **선도적인 농촌공간계획 사례 제시**

- **지역별 설명회**(10회), **정책간담회**(40회) 및 **홍보 강화**로 지자체, 현장조직, 주민 등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농촌협약**) 시·군이 수립한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게 **중앙-지자체 간 통합 재정지원**(5년간 최대 300억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체결 지속 확대

- '24년 **22개 시·군**(양평, 옥천 등)*, **누적 75개 시·군**과 **협약** 체결(4월)

* 5년간('24~'28) 총 5,549억원의 국비 사업 지원, 지자체는 타부처 사업 및 사업 연계

○ (**협업**)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하여 지역소멸 등 범부처 대응 강화

*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 연계

* (중기·행안·법무부) 소멸 대응을 위한 부처별 정책 수단(기업지원, 생활 인프라 등) 연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촌공간계획의 정책효과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농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 필요

○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 타부처·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연계, 제도 개선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노력 필요

○ 현재 농촌공간계획 제도 추진기반 마련 단계로, 정책효과에 대한 판단보다는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 많은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지만 도시 인근, 원격지 등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어 중앙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재의 농촌공간계획은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단계로, 성과지표들도 이러한 기반 마련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 해당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본 및 시행계획 등 농촌공간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고,

- 농촌특화지구가 지정되어 조성·운영되면 농촌주민들이 체감하고 정책효과를 직시할 수 있는 지표 발굴 가능

○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여러 방안 마련 중이며,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타부처와의 사업 연계 체계가 확고해지고,

- 농·산지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른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각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강화

* 현황 : (중앙)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광역) 8개 도(道)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3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ㅇ (1) 농촌형 교통모델 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필요하며, 추진계획 수립 프로세스 제시 필요 ㅇ (2,3,5,6)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고, 추진계획이 적절함 - (4) 이해관계자와 세부사업간 연결 방향 판단 어려우며, 농촌공간계획 제도하에 일련의 사업들이 별도로 진행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1) 정량지표 추가 필요 ㅇ (2) 3개의 지표가 다소 중복,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 필요 ㅇ (4) 임시 지표로는 적합하나, 향후 지속적인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ㅇ (5) 1, 3 지표는 적절, 2번 지표는 정량적 지표로 변경 필요 ㅇ (6) 3개 지표 모두 적절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2-1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ㅇ (1,3,4,5,6) 일부 보완 필요 계획 외 완수함 ㅇ (2) 예정대로 계획 추진됨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ㅇ (1) 협업노력·성과 긍정적 평가, 사업발굴 확대 필요 ㅇ (2) 본 사업은 타부서와의 긴밀한 공조 필요 ㅇ (4) 다양한 협업이 인정됨 ㅇ (5) 협업노력·성과 긍정적 평가, 실질적 효과가 아직 크지는 않음 ㅇ (6)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적절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3	**[적극성]** ㅇ (1,3,5,6) (지표1)적극성 낮음, (지표2, 3)적극성 보통 ㅇ (2,4) 지표의 적극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음 **[달성도]** ㅇ (1,2) '24년 목표 대비 100% 이상 실적 달성 - (3,4,5,6) 지표1의 경우, 추가 실적 증빙 필요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① 정책효과 발생 정도]** ㅇ (1)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정책효과 발생 정도 긍정적 평가 - 주민 주도의 액션그룹 등은 청년농 정착 등 농촌 공동체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ㅇ (3) 정책효과에 대하여 정략적 제시 필요 ㅇ (4) 현재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계획 추진 시 정책을 구조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5) 해당 정책이 현실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판단, 현재까지 정책효과 발생도 양호하다고 평가 ㅇ (6)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향후 기대효과]** ㅇ (1) 생활 SOC 외에도 농촌 경관 특성을 활용한 농촌공간(건축) 디자인도 중요 ㅇ (2) 기본적인 농촌 생활 향상의 기틀을 잡는 사업 ㅇ (3) 향후 예상되는 효과 구체적 제시 필요 ㅇ (4) 지역 역량 차이에 따른 불균형에 대한 우려 상존 ㅇ (5) 농촌공간계획이 농촌소멸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ㅇ (6) 농촌개발 사업의 개선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기대효과 발생 예상 **[③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ㅇ (1)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통합 DB 구축과 관리는 농촌 공간 보전에 중요 ㅇ (3,6) 상위 목표 달성에 기여 ㅇ (4) 상위목표인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잘 연계 ㅇ (5) 사회 구현의 달성에 큰 기여할 것으로 판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1) 지적 사항과 국회, 언론이 제기한 이슈들에 적극 대응 ㅇ (2) 지적 사안에 대해 정책개선 및 사업 방향의 구체화를 통하여 환류 이행을 성실히 함 ㅇ (3) 지적 사항을 이행함 ㅇ (4) 주요정책평가, 국회, 언론의 지적 사항들을 종합하여 구체화한 것이 인정됨 ㅇ (5) 지적 사항에 대한 정책개선과 환류 이행 우수 ㅇ (6) 자체 평가 지적 사항 관련 개선 노력 및 성과지표 보완 등 구체적 반영 실적 확인

3-1-3	농촌 정주여건 개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복합서비스 거점시설(생활SOC 시설)을 복합화·단지화하여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농촌형 복합 생활 서비스 거점 시설(누계): ('22) 797개소 → ('23) 930 → ('24) 1,043

○ 지역주민의 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읍·면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후마을 전달체계 발굴·확대

- 식품사막 해소를 위해 지자체·농협과 협업하여 트럭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 현장간담회 및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계획' 발표(장관, 7.29., 영광)

○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높은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자부담률 하향 등 사업 개편('24.3월)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누계): ('22) 449개소 → ('23) 529 → ('24) 637

- 농촌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사업대상자 확대

* 대출한도 상향: (기존) 2억원(신축), 1억원(증축) → (개정) 2.5(신축), 1.5(증축)

-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 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마련

* 취약계층 주거개선(누계): ('22) 7,032가구 → ('23) 7,607 → ('24) 8,177

○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농촌보금자리 조성'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및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등 설치

* 청년농촌보금자리(누계): ('22) 5개소 → ('23) 9 → ('24) 17

○ 빈집 정비·거래 등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정부 내 협력 강화

-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등 인센티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패널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25억원),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정보시스템(빈집은행)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 확보**('25년 13.5억)

* 주소, 입자유형,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 전문기관(부동산원)을 활용하여 조사('24 신규, 국비 25억원)

** 빈집 정보를 거래 가능 수준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 신설('25,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13.5억)

○ 빈집을 임대주택, 마을 세탁소·호텔 등 지역 활력 제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관 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23.7월~)

* ('24년, 세종시) 협력재단 등이 참여해 빈집을 전통체험장·귀촌인 하우스 등으로 활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청년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 등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매우 높은 문턱, 예산확보 등 단계적 집중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귀농·귀촌 청년의 농촌에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주거 지원 확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농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 정책워크숍을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 ㅇ 성과지표는 상위정책 달성 및 정책에 기여하는 과제로 실천과제이며, 협업과제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ㅇ 법무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와 협업 생활서비스의 밀착 지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협업 체계 구축, 범정부 빈집정비 TF 운영으로 협업 실적 '우수'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2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실적 100% 이상 달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복합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과업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부담 하향, 지원단가 상향, 청년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복합단지조성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책효과 발생 정도 '탁월'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주요정책평가,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처 등 정책 개선 및 환류 이행을 위해 노력

3-2-1	농촌 사회 서비스 활성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령 제정, 서비스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농촌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4.8.17)

- **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한 서비스주체 육성 및 인프라 구축**

*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돌봄마을 3개소(화순, 성주, 홍성) 조성

○ **농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장학금 지원)** 농업인자녀·농업후계인력 대상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 **우수한 후계인력 양성**

- **(재능나눔)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개인 및 봉사 단체**들의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

○ **농업인 등 농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강화**

- **(건강보험)**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월최대 28% 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월최대 50%**(46,350원)**을 지원**하고, **지원기한 연장**(~'24년 → ~'31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

- **(영농도우미)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농도우미 활동 지원**

- **(왕진버스)**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구강 관리, 검안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접근성 완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과제별로 분기별(월별) 추진계획 수립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농촌 돌봄, 교육,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사업계획이 달성되도록 추진계획 수립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탁월하며, 국민체감도가 높고 외부변수와 전문성 또한 높아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임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1	ㅇ 문체부와 농촌 문화여건 개선 협업 체계 구축, 복지부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협력 등을 추진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성과목표는 과거 실적 대비 적극성이 높게 설정되었으며, 성과목표도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농촌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농촌 교육·문화 여건 개선, 농촌 복지 증진을 통해 과업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타 부처와 연계하여 다양한 농촌 복지 혜택 지원 등 정책효과 발생 정도가 탁월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주요정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처 등 정책개선 및 환류 이행 실적 '우수'

3-2-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결혼이민여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확대 시행

- 검진 대상인원(9천명→3만명)과 지역 확대(18개 시군→50개 시군),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동검진 지역 확대 운영(1개 시군→14개 시군)

○ 여성농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186개소)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 농번기돌봄지원 대상 연령 및 운영기간 확대, 급간식비 등 운영비 인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여성농업인 육성 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의료·보육서비스 제공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 성과지표는 이를 포괄하여 측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 목적, 성과지표, 계획 등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서술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성과를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보완 필요

○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질적 성과 평가를 위해 정책의 목적과 성과지표, 이행계획 등 연계성을 강화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3	ㅇ 계획수립을 위해 현장방문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의견수렴 결과 반영에 대한 결과 제시 필요 ㅇ 성과지표가 과제 전반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사회안전망의 다양한 요소 중 일부만 반영하였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과제별 추진계획은 이행을 완료하였고, 다양한 기관·정책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3개의 성과지표 중 2개는 목표치의 적극성이 높으나, 1개 지표는 신규지표로 보통으로 평가 ㅇ 최종적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모두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	ㅇ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책 효과 평가는 다소 어려움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와 상위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상세히 기술할 필요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3	ㅇ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를 시행하였으나 환류가 성과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3-3-1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농촌융복합산업)** 컨설팅·자금·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인증사업자 수(개소) : ('23) 2,396 → ('24) 2,525/ 총 매출액(조원) : ('23) 4.2 →('24(p)) 4.5

- **(컨설팅)** 경영체의 **취약분야** 및 **애로사항에 따라** 기술,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위원 매칭**을 통한 **현장 코칭** 및 **장기 보육** 실시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건수 : ('22.9) 1,626건 → ('23.9) 1,786 → ('24.9) 2,251 → ('24.12) 2,451

- **(자금)** 시설 확충, 원료 구입 등을 위한 **자금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및 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 연 150억 한도 내 2.0% 금리 융자/상환기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 **(제도개선)** **농촌융복합시설 입지특례 적용 범위 확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개선을 통해 **초기 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 및 산업 활성화 유도

구분	기 존	개 선
대상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 획득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을 획득한 자
범위	건축(신축, 증축 등)만 허용	건축 외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 허용

- **(판로)** 농촌융복합산업 온·오프라인 **전용 판매관 운영** 및 지역 내 **정기적 수요개척 등 판로 다각화**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액 신장** 지원

* 안테나숍(94개소), 지역유통 판매플랫폼 판촉행사(330회), 식품박람회 및 축제 내 판매 부스 운영 등

- **(민간투자 유치)** 전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선정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강화** 및 **민간 투자 유치·협업** 등으로 우수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진단 및 역량 강화 교육, 투자자(VC) 대상 기업설명 및 홍보(IR) 등

○ **(농촌관광)**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서비스 표준화 등 **농촌관광 기반 조성** 및 관광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로 **농촌 관광객 증가**

* 농촌 관광객 수: ('22) 928만명 → ('23) 1,125 → ('24) 1,158

- **(제도개선)** 농어촌민박 관련 **규제**를 **완화**하되,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 발표(7월)

- **(서비스·안전)** 숙박 **서비스 표준화***, 농어촌민박 **브랜드화**(시고르스테이), **전문인력을 활용**한 **서비스·위생·안전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 **(기반조성)** 대중교통을 활용한 **농촌 접근성 제고** 및 **농촌형 워케이션, 빈집 활용 숙박업**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체험 공간 조성**

* 농촌 투어패스, 농촌 워케이션 조성(6개소),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 **(콘텐츠 개발)** 민간 여행사 협업으로 **농촌관광자원**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운영**(농촌크리에이투어, 20개소)

- **(대국민 홍보)** 농촌관광 방문객 유입 촉진을 위한 **도농교류의 날 행사(7월) 개최, 홍보영상 제작** 및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 여름·가을철 촌캉스 및 계절별 테마여행 코스 추천 콘텐츠 제작, KTX·지하철·광화문·서대문 전광판 등에서 농촌관광 홍보영상 송출, 기획기사 연재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타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부족함

○ 농촌관광이 해외여행과 국내 다른 형태의 여행(리조트, 캠핑, 호캉스 등)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 및 민간 협력 확대 필요

○ 농촌관광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관광상품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홍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1	ㅇ 현장방문, 협의체, 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함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계획 및 일정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ㅇ 농촌융복합사업자의 발굴 활성화 및 판로 개척,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 유통채널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사업달성도 또한 당초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ㅇ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농촌 관광객 증가, 농촌관광 경영체 역량 강화 등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남 ㅇ 농촌관광 품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 ㅇ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지원을 통해 상위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달성에 상당 기여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1	ㅇ 주요정책평가, 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신규 성과지표 도입 및 신규사업 발굴 등 개선으로 정책환류 이행함

3-3-2	농협 제도개선 및 농식품 투자·자금 지원강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제사업 활성화**) 조공법인 자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한 **조공법인 활성화**, 농협 경제사업 평가·점검을 통해 **책임판매 목표비율 달성**

* 책임판매비율 : ('23) 38.0% → ('24) 41.3('23년 대비 8.3%↑, 24년 목표 39.6% 대비 1.7%↑)

○ (**농협제도개선**) 지역 농축협 내부통제 강화, 상호금융예금자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등 조합 운영 관련 법령 등 개정

- (내부통제 강화) 조합 상시 감사체계 강화를 위해 **상임감사 의무 도입 조합 확대***(총자산 1조원 이상→총자산 8천억원 이상), 조합 내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준법점검 실시 의무화**

* 농협법 시행령 개정(10.8) / ** 지역농·축협 및 품목조합 정관례 개정(1.31)

- (농협 운영개선) 조합 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금융예금자 보험료 부과 대상에 예금담보대출 금액을 제외(11.26,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

○ (**투자확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스타트업, 청년기업 육성 등을 위해 **2,173억원 규모의 13개 자펀드 결성, 1,555억원 신규 투자**

* 신규투자 : ('23년) 1,267억원 → (24년) 1,555억원('23년 대비 288억원, 23%↑)

○ (**적기 자금지원**) 자금 배정 주기 단축(반기 2회→수시), 대출절차 간소화(심사기간 2개월 단축), 셀프체크리스트 마련·배포 등 자금 지원절차 개선 등을 통해 **영농기 적기 자금지원 목표 달성***

* '24년 농축산경영자금 지원계획 10,400억 중 6월까지 지원액 9,301억(89.5%)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협 제도개선 등 과제 추진실적이 상위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성과 기여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전략목표 : 농촌지원을 강화하고, 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한다 / 성과목표 : 농업활동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상위 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 기여를 확대하도록 현행 과제 분류 조정 필요. 차년도 과제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25.상반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3	ㅇ 정책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도출된 안들이 추진계획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ㅇ 4개의 성과지표 모두 국민적 체감도 및 달성의 어려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24개 세부추진계획들의 모두 수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일부 계획들의 경우, 증빙자료에 집행결과나 실행성과가 아닌 계획 추진만이 제시 * 1차평가 후 연도말 기준 실적 관련 근거자료 제출 ㅇ 농식품 투자자금 지원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하여 대응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일부 효과가 있었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1	ㅇ 농축협 제도개선의 경우, 법령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전치가 높다할 수 있음 ㅇ 농식품 분야 투자실적의 경우 과거실적 대비 105%로 도전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보통)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	ㅇ 농축협 제도개선을 통해 농협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농식품투자자금 지원이 강화되어 농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자체평가시 지적 사안에 대해 정책 개선 및 사업 방향의 구체화를 통하여 환류 이행을 성실히 함 ㅇ 주요정책평가 및 국회, 언론의 지적사항들에 반영하고 개선하였음

3-4-1	동물복지 제도·인프라 확충 및 동물 보호·복지 인식제고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동물학대 시 현장 대응능력 제고 및 동물학대 자가진단**을 통해 반려동물 생명과 동물복지를 강화

- 반려동물 **번식·영업장** 내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강화,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제도개선* 추진('24.2~)

- 학대 현장 신속 대응 지원를 위한 **「동물학대 대응매뉴얼*」** 마련('24.7월) 및 국민 대상 동물학대 체크리스트 개발·배포('24.12월)

○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제도·인프라 개선**

- 지자체·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8월, 41개소) **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 운영(6~9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계획(10월) 등

- 맹견사육허가 시행('24.4월~, 계도기간 1년 운영)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 사회 전반의 **동물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교육·홍보 강화

- 중장기 효과성을 감안하여, '동물사랑 배움학교'*, 체험프로그램(동물의사·보건사) 운영 등 **미래세대** 중심 **생명 존중 교육 확대**

* '동물사랑 배움학교' 참여 아동 대상 설문조사(농식품부, '24.11월) 결과, 생명 존중 등 인성 함양에 긍정적 효과(교육 전 4.49점/5점 만점 → 후 4.63)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관리계획상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 필요

○ 정책 환류 노력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동물복지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분기별, 월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됨 ㅇ 인식제고는 대표하고 있으나 인프라 확충을 포괄하는 지표 필요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3	○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 전문가, 타부청과 협력을 통해 시설개선, 입양프로그램 개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 성과지표 1 적극성 : 높음 - 직전 3개년 실적 대비 '24년 실적은 237%로, 목표치의 적극성은 '높음'에 해당함. ○ 성과지표 2 적극성 : 보통 - 해당 성과지표는 신규지표임으로,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에 해당함. ○ 2개 성과지표 모두 '24년 실적 목표 대비 실적을 100%이상 달성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2	ㅇ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동물학대 대응매뉴얼 마련, 사업지침 개편, 인증제도 고도화 추진, 안전관리 제도 도입, 사회 인식 개선 등 정책효과가 탁월함 ㅇ 지속적인 정책추진할 경우, 당초 기대한 정책 사업 효과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기대효과는 '보통'으로 평가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주요정책평가 및 국회, 언론 등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및 환류 이행하였으나 일부 '개물림 사고 예방과 같은 국민안전 방안 마련' 등의 지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 '보통'으로 평가

3-4-2	반려산업 육성 및 동물의료, 영업 개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 기업 요구도가 높은 정보조사, 해외인증, K-Pet Fair 박람회 개최, 상품 연구·개발 등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추진

* 시장조사, 판로개척(인증, 법률 등 현지화), 박람회 개최, 수출제품 고도화 연구개발 등 지원

- One-Welfare Valley 조성으로 스타트업 창출, 기술 산업화 등 연관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품질경쟁력 확보

*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기호성, 효과성 등을 실증하는 인프라

-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률* 제정 추진

* 제품 품질인증 기준 도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 포함

○ 동물 의료체계 개선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 및 의무 적용 대상 병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내용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편차 완화 유도

*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을 선정, 표준 절차가 마련된 항목부터 단계적 고시('25. 누계 100종)

-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의 직업윤리 인식 강화 및 동물보건사 등 전문인력 역량 제고

○ 체계적 영업관리로 반려동물 및 반려인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통한 안전 인식 확대

- 지자체 자체 점검계획에 따른 관내 영업자 대상 기본점검 시행 및 중앙-지자체 합동 동물복지 민감업종(동물생산·판매업 등) 집중 점검

* 24년 상반기 총 10,055개소 점검, 291건 적발·조치(고발(13), 행정처분(32) 등)

- 전문가로 구성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자격시험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신규 수출지원 사업임을 감안, '25년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등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성과 분석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등 정책 효과성 심층분석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반려산업 육성 및 동물의료 등 이해관계자의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등 반영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분기별(월별) 추진계획 적절히 수립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및 수의사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 성과 목표는 과거 실적 대비 적극성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1, 2, 3은 '24년 목표 대비 실적이 100% 이상 달성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1	○ 반려동물 체계적 수출지원, One-Welfare Valley 구축 연관산업 육성 기반 마련, 연관법률 제정, 펫푸드 안전관리 강화 및 특화 제도 마련, 동물 의료체계 개선, 체계적 영업관리를 통한 반려동물과 반려인 복지 증진, 자격제도 시행 등 정책 기여 효과 '우수' - '24년 개선된 정책 추진으로 향후 정책 효과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수'로 평가 ○ 성과지표 달성을 통해 상위목표 '동물복지 강화 및 연관산업 육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우수'로 평가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 주요정책평가, 언론의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처 등 정책개선 및 환류 이행 실적 '우수'

3-4-3	개식용종식 이행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업계의 폐업과 관련된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에 노력을 기울임

○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함

○ 국회·언론 및 자체 평가 지적 사안에 대해 정책개선 및 사업 방향의 구체화를 통해 환류 이행을 성실히 이행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027년 개식용종식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는 법령 정비·지원 방안 마련·기본계획 수립·협업체계 구축 등 추진 기반 조성 필요

- 2024년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원년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설정 불가 판단 → 노력을 알 수 있는 정성지표로 설정

- 당초 계획 수립시 의도한 정책효과 및 성과지표는 100% 달성하였으나, 외부에서의 실질적 정책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한계 존재

○ 2024년 추진기반 조성에 따른 실질적 정책효과는 2025년 업계 전·폐업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날 것으로 판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025년은 개식용종식 이행의 원년인 만큼, 정책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 및 업계 전·폐업 지원 등 추진

- 개식용종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업계 전·폐업 지원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 아울러,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여 원활한 개식용종식 이행 및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급)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	ㅇ 개식용종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노력 및 공감대 확보를 통한 정책수용성을 높이고자 한점이 우수하다 판단됨 ㅇ 개식용종식 이행토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마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등 추진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ㅇ 개식용종식은 현재 초기 단계이므로, 현 성과지표는 관리과제를 어느정도 대표하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2	ㅇ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TF의 중심이 되어 정부지원협의체, 위원회, 지방협의체와의 협업체계를 갖춰 다양한 노력을 함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2	ㅇ 두 지표 모두 목표로 하였던 성과를 달성하였음
3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 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3	ㅇ 2024년까지는 지원계획 및 체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실질적 정책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2027년 식용목적의 개사육, 도살, 유통, 판매의 전면 금지를 통해 향후 사회적 문제 유발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4 환류노력도 4. 정책환류 노력도	2	ㅇ 국회와 언론을 비롯하여 업계, 동물권, 소비자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 및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배포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노력이 인정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1-1	ㅇ 정부양곡 재고량 증가에 따른 재고 감축 방안 필요	ㅇ '24년에 수출용 최초공급(2만톤) 한 바 있으며, '25년에도 관련 업계·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부양곡 수요처 적극 발굴 추진*(연중) * 수출용 공급은 '24년 신규 추진
1-1-2	ㅇ 전략작물직불 재해 구제방안 마련 및 단가 인상 추진 필요	ㅇ '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단가(밀·하계조사료) 인상('24.12월) ㅇ 전략작물직불 재해 구제방안 마련('25년 재해발생 시)
1-1-3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	ㅇ '25년 성과지표는 과제목표 및 과거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25.2월)
1-1-4	ㅇ 성과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효과 제시 필요	ㅇ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사례, 외부 언론보도 등 실적 제출('25.1월)
1-1-5	ㅇ 수요창출방안 마련	ㅇ 가루쌀 산업 육성정책 개선방안 수립('24.12월) 및 집행(연중)
	ㅇ 목표치 수정	ㅇ 가루쌀 산업 육성정책 개선방안 수립('24.12월) 및 집행(연중)
1-2-1	ㅇ 안정적 농업인력 고용을 위한 체계적 중장기 계획, 지원 필요	ㅇ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25.4월)
	ㅇ 외국인 근로자 대상 농작업·안전 교육 및 교재 제작·보급, 기숙사 건립 확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인권·노무 교육 및 상담 강화	ㅇ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농작업·안전 교육, 인권·노무 등 상담 및 지원(연중)
1-2-2	ㅇ 공익기능 관련 성과 평가 체계 필요	ㅇ 전문가 검토 등 거쳐 공익기능 및 선택직불제 관련 성과평가 체계 개발('25.12월)
1-2-3	ㅇ 적극적인 품목확대 계획에 따라 `26~`27년 신규 품목 도입 및 지역 확대 품목 선정 추진(`25.2월~)	ㅇ '26년 신규품목 및 지역확대 수요조사('25.3월)→ 2단계 평가(4~5월) → 최종선정 및 상품개발(6월~)
	ㅇ 이상고온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성 병해충 보장 상품 개발	ㅇ 손해평가방법, 보상기준 등을 마련하여 상품개발 및 판매('25.4월~)
1-3-1	ㅇ 온라인도매시장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및 홍보강화 방안 마련 필요	ㅇ '25년 거래목표(1조원) 달성 방안 마련('25.3월) ㅇ 온라인도매시장 성과 기획기사 추진('25.6월)
1-3-2	ㅇ 성과지표별 달성 난이도 검토하여 목표치 및 가중치 차등 적용	ㅇ 목표치 및 가중치 재설정('25.10월)
1-3-3	ㅇ 재해예방, 신품종 보급·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 필요	ㅇ 재해예방시설, 신품종 보급 등을 포함한 스마트 과수원특화단지조성사업 추진('25.1월~) * 사업대상자 선정(4개소) 및 지원
1-3-4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 수렴	ㅇ 축산농가, 지자체, ICT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5.8월)
	ㅇ 스마트축산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데이터관리 체계 마련('25.6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3-5	ㅇ 농가 경영비 대비 도매가격을 비교했으나, 지표의 성격이 모호	ㅇ 정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25.5월)
	ㅇ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은 인정되나,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부족	ㅇ 식량주권 확보 및 농가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소비자물가안정 외 축산농가 지원 강화도 필요('25.10월)
1-3-6	ㅇ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설명 등 적극적인 국회 대응을 통해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일 것	ㅇ 축산물 유통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25.12월)
1-4-1	ㅇ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지원사업의 사업중단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법 검토 필요	ㅇ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먹거리계획 전문가(FD) 자문을 통하여 계획의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를 통한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먹거리계획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연중)
1-4-2	ㅇ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정책 수혜자 확대를 위해 농민단체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중관리를 위한 행정력 편성 필요	ㅇ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요구에 따른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 신규 편성('25.4월)
	ㅇ 축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초 이행주체인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교육과 더불어 최종 소비자인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 필요	ㅇ 대국민 홍보를 위한 축산물 PLS 홍보영상 등 제작·홍보('25.12월)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수요조사 및 전문가 심의회 개최	ㅇ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신규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수요조사 실시('25.2월) ㅇ 유통이력 대상품목 지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회 개최('25.4월)
1-5-1	ㅇ 식량원조 물량 확대	ㅇ 식량원조 물량 확대를 반영하여 2025 식량원조 사업 추진계획 수립('25.2월)
1-5-2	ㅇ 농업통상 및 국제기구 대응 강화를 통해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할 필요	ㅇ 통상이슈 대응, 농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 등 수출 지원 및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25.12월)
1-5-3	ㅇ 증가하는 비관세장벽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물 해외시장성 및 검역위생조건을 조사하고 국가-품목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조속한 협상 타결 집중 추진 필요	ㅇ 국가·품목별 농축산물 해외 시장성 및 검역위생조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5년도 중점추진품목 선정 ('25.3월) ㅇ 선정된 중점추진품목에 대한 검역협상 추진 (연중)
1-5-4	ㅇ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추진계획 수립 필요	ㅇ 분기별·월별 과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25.6월)
1-5-5	ㅇ K-라이스벨트 사업 연계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ㅇ 2025~2029년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25.1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1-1	ㅇ 청년농업인 육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ㅇ 농업인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연중) * 예비농 → 신규농 → 성장농 → 전문농
2-1-2	ㅇ 투입이나 산출 지표보다는 결과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성과지표 가중치도 현재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가 80%, 농지제도 개선이 20%인데, 중요도 등 고려하여 가중치 검토 필요함	ㅇ 성과의 연속성, 사후관리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투입·산출 지표가 아닌 결과 지표를 발굴하여 가중치 등 재설정 추진('25.12월)
2-2-1	ㅇ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 검토	ㅇ 스마트농업 확산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예정('25.6월)
2-2-2	ㅇ 농기계.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	ㅇ 농기계.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을 추진하겠음('25.12월)
2-2-3	ㅇ 노지 및 시설 스마트농업 등 농업인에게 직결될 수 있는 많은 과제 발굴되어야 함	ㅇ '25년 신규과제 기획 시 농업인에게 직결될 수 있는 과제 기획 및 선정('25.6월)
	ㅇ 국민체감 농식품 R&D 성과 확산 필요	ㅇ 국민체감 R&D 성과확산을 위해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개최('25.12월)
2-3-1	ㅇ 중기부 등과 협업 등 범부처 협업 노력이 필요	ㅇ 중기부 등 타부처와 회의·간담회를 통해 협업을 논의하고 미래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25.12월) - 수출 유망기업 등에 민관협력형 스마트공장('25, 약 70개소 예정)을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삼성·농협, 농식품부 협업)
2-3-2	ㅇ 월별, 분기별 과제추진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할 필요	ㅇ 향후 산업현황, 경기지표 및 전년도 사업결과 등 감안하여 '25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연중)
	ㅇ 한식의 글로벌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 비전 하 꾸준한 노력 필요	ㅇ 국제행사 연계 한식 홍보(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APEC 등), 한식 연구 등 한식 산업 기반 강화와 확산을 위한 꾸준한 정책 추진(연중)
	ㅇ 물가안정 기여에는 인건비나 물가 등 외부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업무 추진에 참고할 필요	ㅇ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음식점업 비전문취업(E-9) 제도 활성화, 배달수수료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외부환경 요인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 병행 추진(연중)
2-3-3	ㅇ 성과지표 간 중복 제거를 위해 성과지표를 추가 검토하여 보완	ㅇ `25년 성과지표 설정('25.3월)
	ㅇ 최근 성장세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 설정 필요	ㅇ `25년 성과목표 설정('25.3월)
2-3-4	ㅇ 전후방산업 수출 실적 목표 달성 필요	ㅇ K-스마트팜 로드쇼 확대 개최, 수출 컨설팅 범위 확대, 컨소시엄 수주지원 개소 증대 등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추진(연중)
2-3-5	ㅇ 그린바이오 산업의 다양한 분야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필요	ㅇ 그린바이오 산업 다양한 분야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추진('25.6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3-6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사업 세부추진계획간 연계 강화	ㅇ '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25.1분기)하여 7개 내역사업 연계 추진(연중)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및 준공기업 확대를 위한 지속 노력 필요	ㅇ '25년도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25.1분기)하여 입주지원회의, 소통간담회, 경영자문, 기술지도 등 추진(연중)
2-4-1	ㅇ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필요	ㅇ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차 등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 지급규모 확대('25.12월)
2-4-2	ㅇ 농가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ㅇ 저탄소 축산물의 학교급식 연계 등 유통·소비처 다변화 등을 포함한 ''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계획 마련('25.2월)
2-4-3	ㅇ 제공되는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정보들이 유관기관별 분산 관리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 애로 발생	ㅇ 유관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는 농업·농촌, 임업·산림, 농업용수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25.5월)
2-5-1	ㅇ 방역 정책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지표 보완	ㅇ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25.3월)
2-5-2	ㅇ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정책적 효과 및 가치를 분석하여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ㅇ 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및 그에 따른 정책적 효과 등 홍보('25.6월) * 구제역의 경우 최근 10년간('14~'23) 매년 발생(코로나 방역기간인 '20~'22년 제외)하였으나, '24년은 연도 기준 첫 비발생 사례
2-5-3	ㅇ 성과 증빙 자료의 홈페이지 공개 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한 출처 명확화	ㅇ '25년 성과 자료 제출 시에도 홈페이지 공개 또는 내부 결재를 통한 공식 자료 제출('25.11월)
	ㅇ 농가의 능동적인 방역 체계 유도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및 반영	ㅇ 농가의 능동적인 방역 체계 유도를 위해 농가 대상 교육 강화 등 방안을 특별방역대책에 반영('25.9월)
3-1-1	ㅇ 지수개발은 법개정 등 난이도는 높으나 결과지향의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ㅇ 2025년 성과계획 수립 시 결과 지향의 신규 지표 발굴('25.6월)
	ㅇ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	ㅇ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25~'29)을 마련(국회보고)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서비스기준 개편 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25.6월) * 관계부처 : 국무조정실(총괄) 농식품부(간사), 해수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21개 부처·청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1-2	ㅇ 농촌주민들이 체감하고 정책효과를 직시할 수 있는 지표 발굴 필요	ㅇ '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지표 발굴 검토('25.3월)
	ㅇ 농촌공간계획 관련 타부처·부서 협업 체계의 긴밀한 유지 필요	ㅇ 기존 협업 및 협조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협업 및 연계 사항 추가 발굴('25.12월)
	ㅇ 도시 인근, 원격지 등 같은 농촌이지만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름을 인지하고 체계적 지원 필요	ㅇ 중앙·광역지원기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광역지원기관을 추가 지정(제주)하여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지원체계 강화('25.4월)
3-1-3	ㅇ 청년 농촌 주거 지원 확대	ㅇ 청년농촌보금자리 신규지구 지원 확대('25.4월)
3-2-1	ㅇ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필요	ㅇ 관련 법령에 따라 농촌 사회서비스 여건, 제공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예정(~'25.12월)
3-2-2	ㅇ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ㅇ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성과지표 보완('25.3월)
	ㅇ 정책의 목적과 성과지표, 이행계획 등 연계성 강화	ㅇ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25.3월)
3-3-1	ㅇ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 및 민간 협력 확대 필요	ㅇ '25년도 업무추진 시 관계기관 및 민간 협력 확대(연중)
	ㅇ 농촌관광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관광상품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홍보 필요	ㅇ '25년도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사업에 개선보완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연중)
3-3-2	ㅇ 상위 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직접 기여가 가능하도록 과제 분류 조정	ㅇ 과제추진계획 수립시 상위 성과목표, 전략목표 과제 분류 조정('25.6월)
3-4-1	ㅇ 반려견 안전관리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추진	ㅇ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을 위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25.6월)
3-4-2	ㅇ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등 정책 효과성 심층분석 필요	ㅇ 수출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사업성과 보고서 작성('25.12월)
3-4-3	ㅇ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필요	ㅇ 성과지표 개선('25.5월)

[붙임] 2024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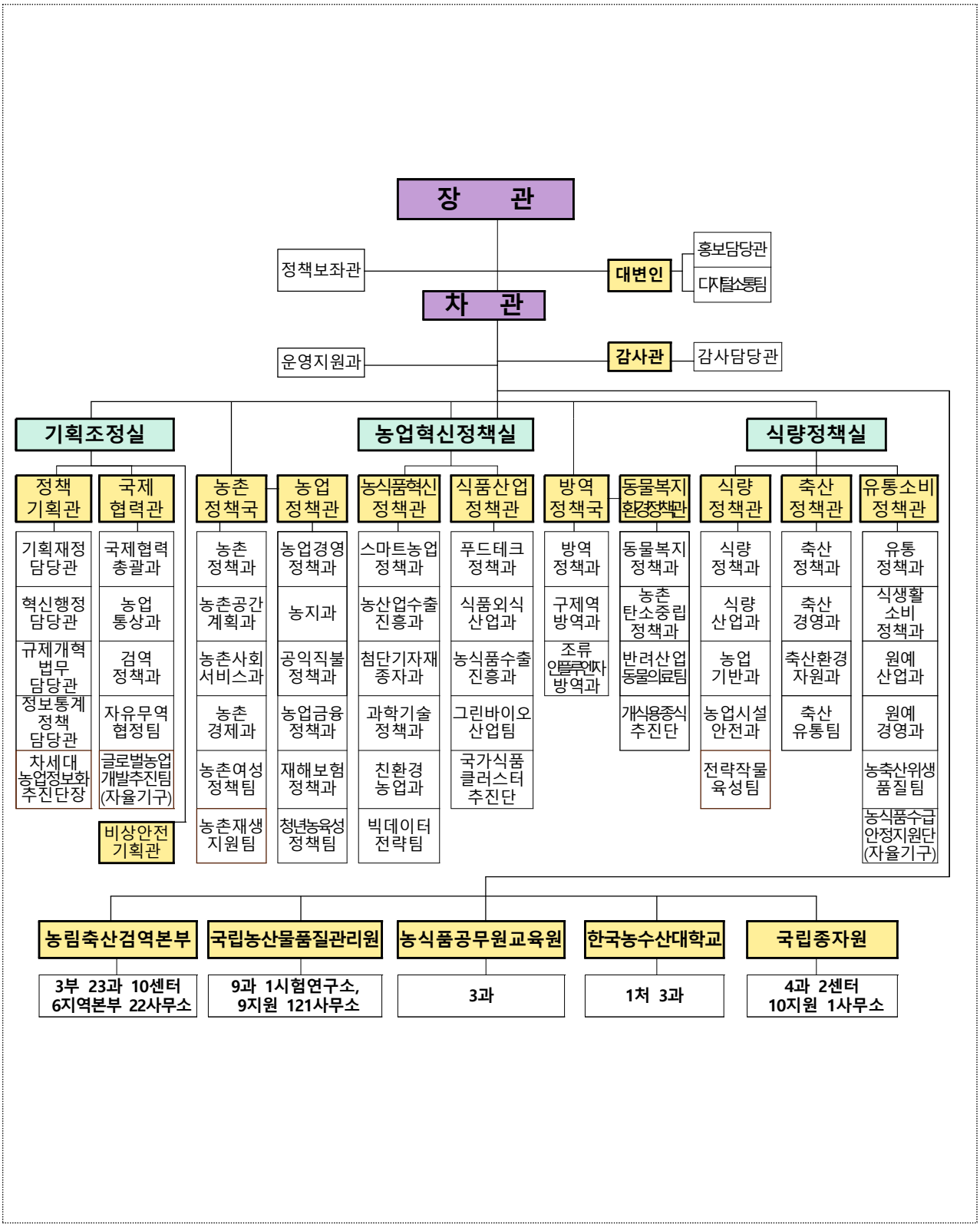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6조)

□ 핵심기능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	① 식량안보 강화 ② 직불금 확대 및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③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④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⑤ 농업분야 시장개방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① 농업인력 양성 및 영농정착 지원 ② 스마트 농업 확산 및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③ 식품·외식 육성 및 수출확대 ④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 ⑤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농촌지원강화, 동물과 함께하는 사회 구현	①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재생 지원 ②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③ 농촌경제 활성화 ④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 조직도

○ 1차관 3실 2국 12관 59과·팀(자율기구 2 포함) 및 5개 소속기관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비전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

전략목표	I.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	II.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III. **농촌지원강화, 동물과 함께하는 사회 구현**
성과목표	■ 식량안보 강화	■ 청년농업인 양성 및 영농정착 지원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재생지원
	■ 직불금 확대 및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 스마트 농업 확산 및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 식품·외식 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 농촌 경제 활성화
	■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	■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 농업분야 시장개방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1)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가경영안정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농가소득액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농가가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재화를 말하여,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
- 조사기관 :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전년도 농가소득을 차년도 4~5월경 발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5.1.16. 발표, 잠정)을 참고
- 조사대상 : 전국 3,300 표본농가(가구원 2인이상 2,900농가, 1인단독 400농가)
- 조사방법 : 표본 농가의 농업 경영실태 및 가계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내역 등을 조사담당자가 면접조사

□ '24년 측정결과(잠정)

○ **2024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5,295만원**으로 추정*

* 통계청 자료는 5월 발표 예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4.1.16.발표, 잠정)** 참고

- **농업소득**은 농업경영비 감소와 농업총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4.7% 증가**(1,278만원), **이전소득**은 전년대비 **1.8% 증가**(1,750만원)할 것으로 추정
- **농외소득은** 전년 대비 **1.2%** 증가(2,024만원), **비경상소득**은 **2.4% 감소**(244만원)할 것으로 추정

※ 농가소득(만원) : ('19) 4,118 →('20) 4,503 →('21) 4,776 →('22)4,615 →('23) 5,083 → ('24p)5,295

□ 성과분석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규모·빈도 증가, 농업 경영비 상승** 등 **농가 경영 위험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 (농가소득) '19: 4,118 → '21: 4,776 → '22: 4,615 → '23: 5,083 → ('24p)5,295

○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 및 **가격 변동성 완화**로 **농가소득 제고**

- 전략작물직불을 핵심 수단으로 **벼 재배면적 2년 연속 감축***, 작황 예측 고도화** 등을 통한 쌀 수급균형 유도

* 벼 재배면적: ('22) 727천ha → ('23) 708 (△19) → ('24) 698 (△10)

** 인공위성·AI 등을 활용한 작황예측 고도화로 벼가 등숙 중인 9월초 작황예측 가능

- **정확한 관측**에 의한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으로 **가격 급락 방지**

* 사과 생산량(KREI 전망) : (평년) 491천톤 → ('23) 394 → ('24) 481

** 소비자가격 : (사과, 10월) 22,907원/10개(전년비 32.5%↓, 평년비 12.2%↓),

- **계약재배물량을 확대**('23: 사과 4.9만톤 → '24: 6)하고, 수급 불안 우려시 출하시기뿐만 아니라 **출하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제 첫 도입**

○ **농가 경영비 지원** 및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확대**로 경영안정 도모

- **농가 비료·유류비 지원** 등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국비 192억원) 및 저리 사료구매자금(9,117억원) 지원, 면세유 제도를 통한 유류비 절감(4,149억원) 등

- 재해보험 보상 확대*와 신속한 재해인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와 경영안정** 지원

* 재해보험 벼 보험금: ('23) 1,649억원 → ('24P) 3,100억원

** 복구비 지원: ('23)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 10건 → ('24.10월말) 일조량 부족, 이상고온 등 15건

- 특히, 이상고온으로 인한 역대급 **벼멸구 피해**를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약 18천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여 **농업인 피해 최소화**

* 피해면적: 17,732ha, 수혜 농가수: 약 17,632호, 재난지원금 : 약 183억원

○ **공공부문 인력지원 확대**로 **안정적 인력수급** 및 **인건비 부담 완화**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약 25만 명 지원)로 영세 소규모 농가 인건비 약 125억원을 절감

- **고용허가·계절근로 배정 규모***, 계절근로 **활용 시군**(127개 시군→**130**) 및 고용허가 대상 **국가****(6개국→**12**) 확대

* 계절근로('23: 34,614명→ '24: **61,248**), 고용허가('23: 14,950명 → '24: **16,000**)

**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밑줄은 신규 지정 국가)

-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세 농가에 일(日)단위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23) 19개소 → **('24) 70 (3.7배↑)**

* ('23.12월) 19,353농가 / 연인원 70,853명 지원 → ('24.12월) 62,668 / 248,984

○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립**으로 농업 경영 지속 도모

- **기본형 직불금 2조 3천억원**을 지급하여 **128만 농가의 기초소득 지지**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

* 평년 대비 당해 연도 농업수입 40% 감소 가정 시, 평년 수입의 85.8%+α 수준으로 수입 안정[수입안정보험(20%) + 기본직불(5.8%) + 선택직불(α) = 85.8%+α]

* 주요국 농업수입 보장수준: 미국 86.3%+α, 일본 82~87%+α+β, 유럽(프랑스) 88.6%+α(부분 보장)

□ 향후 추진계획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및 **고품질 품종 중심** 쌀 소비·공급체계 **전환**

* 지자체에서 지역별 감축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점검을 통한 감축 목표 이행 추진

**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 양곡표시제 개편

○ **수급관리거버넌스 운영 확대**('24: 마늘·양파 → '25: +양배추·포도) 및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강원도 배추, 제주 무 등)

○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 대응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 '24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9개 품목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25년 신규 도입하는 6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운영 추진

○ 공익직불 시행 후 **최초 기본직불 단가 인상*** 및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을 추가하고, **지급면적·단가 인상****

* 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 5% 인상, 밭 직불단가를 논 직불의 80% 수준까지 인상

** (밀) 50만원/ha → 100, (하계조사료) 430만원/ha → 500, (깨) 100만원/ha(신규)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4: 2,550명 → '25: 3,032) 및 저리 **사료구매자금 1년 상환 유예**(한육우)

(전략목표 2)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성과지표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성과지표 개요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 개념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가 높은 생산거점을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로 선정하여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 조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조사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생산자단체 등
- 조사방법 : '24년말(12월) 농식품부 자료
- 측정산식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결과(개소수, 누적)

□ '24년 측정결과

○ '24년도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15개소를 선정(누적 66개소)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가 높은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가 계약재배(전속출하 80% 이상)를 통해 관리하는 지역

** HW(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SW(마케팅 컨설팅, 제품 홍보, 농가 교육)

□ 성과분석

○ 집적지구*에 **생산·유통·가공 시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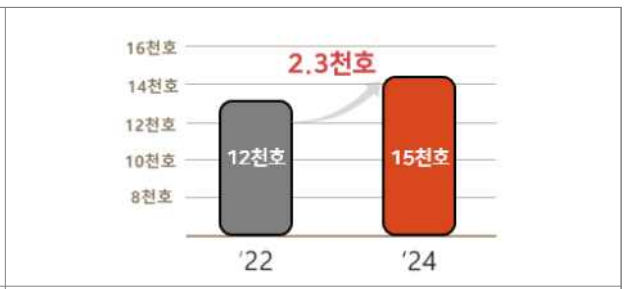
* 친환경농지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조성계획(누계) : ('22~'24) 51개소→ ('27) 100

** 친환경농업지구·단지 내 친환경(유기)인증 면적 증가 : ('22) 15,407ha → **('24.6월) 19,143ha**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통한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인증 농지면적 확대**에 기여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 증가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농가 수 확대

○ **(대내외 여건)**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 감소 등 전체 경지면적은

지속적 감소 추세(최근 3년간 연평균 △1.2%),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 등 친환경적인 농작물 재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임

* 태풍발생 : 과거 30년간(1991~2020년)에 비해 지난 10년간(2011~2020년) 태풍 발생빈도는 25.1회에서 26.1회로 증가, 국내 영향 태풍 횟수 3.4회에서 4회로 증가

- 기존 친환경농업지구가 **친환경농지 간 연접성**과 사업자의 **유통역량 미흡**으로 **비산오염 및 친환경농가의 이탈 방지**에 **한계**를 보임

* 최근 10년간 육성된 친환경농업단지 238개소 조사결과('21.7월), 지구별 인증면적은 선정 당시 대비 평균 약 11.7%(89.9ha → 79.4), 인증농가 수는 평균 18% 감소(74호 → 61)

○ **(사업지침 개선)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1.31.) 및 시행(2.7.)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24.1.31.)**
▪ **(취급액 기준 조정)** 쌀 이외 품목(원예, 가공)의 취급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청 진입장벽 완화
▪ **(이행 점검 강화)** 사업지침 조기시달(1월) 및 사업대상 선정시기를 앞당겨(6월→4) 조속한 사업추진 독려 및 집적지구 내 시설·장비 설치 지연시 관리 감독 강화
▪ **(시스템 점검 관리)**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 사업 관리시스템 이행점검체계 마련
▪ **(수출형집적지구모델 지원)** 친환경집적지구를 친환경농업수출전문집적지구로 활용시 수출모델형 맞춤형 지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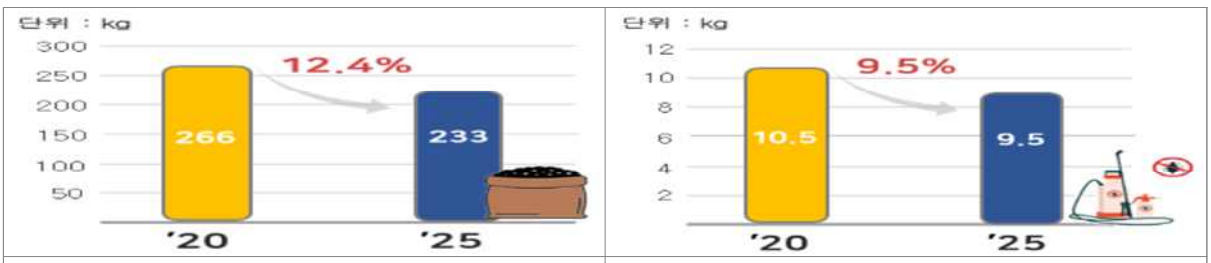
○ **(연계 지원) 집적지구 조성**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인증 확대** 및 **환경친화적 농업의 가치확산**을 위해 **타사업 연계 지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 일반농가까지 지속 확대**('22~)하고, **집적지구 내 일반농가를 우선 지원,** 인증 전환을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확대기반 마련**

* ('24년 지원현황) 6,206백만원, 18천호, 지원면적 35,879ha

**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기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1~'25, 농림축산식품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kg/ha)	농약 사용량 감축(kg/ha)

-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24.2월, 5월 등 2회)*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는 농지는 친환경농업직불도 품목에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하였으나,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농지 이용에 따라 지급토록 개정

□ 향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7년까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100개소 조성, 지구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지원 추진**

* '22년부터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매년 20개소 내외 선정 및 지원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유기농식품 수출 전문 집적지구 반영 여부 및 사업지원 자격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 검토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점검을 강화(상반기: 월별, 하반기: 주간별)하여 집행률 제고

○ 친환경농업인이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대폭 확대 개편**으로 **친환경농업 성장 발판 마련**

- 7년 만의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인상, 26년 만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직불 개편·시행('25~)

* 친환경농업직불 예산: ('20~24) 228억원 → ('25정부안) 319억원(40%↑)

** ① 논단가(유기: 70→95만원, 무농약: 50→75, 유기지속: 35→57), ② 유기지속단가(유기단가의 50%→60), ③ 유기전환(무농약→유기단가), ④ 지급상한면적(5→30ha/호)

성과지표	스마트농업 확산 지수(IS)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시설원예, 축산 분야 스마트팜 보급에 따른 확산지수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정도를 알 수 있는 유용한 도구
- 조사기관 : 농식품부
- 조사대상 : 농식품부, 농진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 조사방법 : 당해연도 스마트팜 사업 추진 실적 조사
- 측정산식 : 0.5(당해연도 스마트팜 면적/전년도 스마트팜 면적) + 0.5(당해연도 스마트축사 수/전년도 스마트축사 수)

□ '24년 측정결과

○ **스마트팜 보급(누적)이 전년보다 확대**('23: 8,196ha/7,265호 → '24: 8,835ha/8,674호)되어 **스마트농업 확산지수는 1.1로 측정**됨

- '24년까지 스마트팜 **누적 보급실적**은 시설원예 8,835ha(전년 대비 7.8%↑), 축산 8,674호(전년 대비 19.4%↑)로 **'24년도 목표치 달성**

<스마트팜 보급 현황>



□ 성과분석

○ **(제도 기반)** 농업인·산업계의 규제개선 과제를 해결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마련(3.26) 및 스마트농업법·하위법령 시행(7.26) 등 제도 완비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 (농지) 농지법 시행령 / (산업단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의 대상 시설에 수직농장 포함

○ **(스마트팜 확산)** 품목별 스마트농업 현장 도입 확산 및 청년·기업 등 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도입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 온실 8,835ha(전년대비 7.8%↑), 축산 8,674호(전년대비 19.4%↑)

◇ **스마트팜 도입 효과**('24.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량 24.0%↑, 농업소득 28.3%↑, 자가노동시간 4.6%↓
- (축산) 자가노동시간 양돈 11.1%↓, 낙농 7.5%↓, 한우 6,56%↓, 산란계 5.1%↓

- 온실·축사·노지 등 스마트팜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및 기술 개발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강화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확대('23년 2,022농가 → '24년 3,341, 누적)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운영,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및 육성지구 선정(4개소) 등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기회 지원

* 선정현황 : ('20년) 2개소(평창·제천) → ('22년) 4개소(양구·영천·신안·장수) → ('23년) 3개소(삼척·김제·밀양) → ('24년) 4개소(서산·예천·영암·영동) → ('25년) 2개소(양양·제주)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20~'25, 5개소) 조성으로 농가의 노지 스마트 농업 서비스 도입 촉진 및 장비 실증·고도화 지원

* 노지작물 주산지에 현장 적용성이 높은 장비(드론 등)·서비스(관수관비 등) 및 기업주도 기술 실증 지원

** (1차, '20~'23년, 준공완료) 괴산 콩(53.2ha, 52호), 안동 사과(61.5ha, 61호)
(2차, '23~'25) 태백 배추(193ha, 68호), 의성 마늘(95ha, 168호), 괴산 유기농 채소(74ha, 216호)

- 스마트농업 **청년 우수교육생 선발**(208명) 및 스마트농업 전문교육기관 지정(시설원예 순천대, 축산 연암대) 등 청년농 육성 본격화

○ **(수출)** 수출기업 밀착지원, K-Food^{+} 홍보, 관계부처 협업 등 노력으로 전년대비 6.1%(130.3억불) 수출 증가, K-라이스벨트 확대

-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확대하고,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하의무계약 활성화 및 신품종 육성·마케팅 지원

* 수출통합조직 : ('23) 15개(딸기, 포도 등) → ('24) 18(참외, 고구마, 한우 추가)

- 스마트팜 수출거점화를 위한 호주(9월), 사우디 시범온실 조성('25년 준공), 컨소시엄 수주지원 사업('24년 신규, 4개社)을 통한 스마트팜 기업 전담지원 강화

*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수주 건수 33% 증가 등

- 아프리카 국가들과 식량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및 K-품종 종자 현지 적응 및 실증 재배 등을 위한 전시포 조성 등

*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짐바브웨, 앙골라 등 4개국('23. 10개국 → '24. 14개국, 누적)

○ (**청년**) 청년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소득·농지·자금·주거 등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청년정책 범위 전후방 확대, 벤처창업 등 지원

- 농업·농촌 청년정책 범위를 농업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까지 확장

*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 발표(8월, 청년농·기업가 현장 간담회)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까지 맞춤형 지원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확대('23년 4천명 → '24년 5천명)

**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45% 공급 확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보증한도 확대(3억원→5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스마트팜 보급, 기술혁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 저변 확대 및 혁신생태계 조성

- 농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농가 등에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27년까지 온실 10,000ha, 축사 11,000호를 목표로 추진

-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5.1월)

- 스마트농업 전문교육기관 지정 확대('24년 2개소 → '25년 4개소)

○ 제2차 후계·청년농육성기본계획 수립(~'27년)

○ 가공식품 외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에 수출목표량 평가를 도입하여 수출 확대 유도('25년~)

(전략목표 3) 농촌지원을 강화하고 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지표 **농촌생활 종합만족도**

□ 성과지표 개요

〈 농촌생활 만족도 〉

- **개념 : 농촌 주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
- **통계명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
- **조사기관 및 조사체계 : 농촌진흥청, 5년 1주기**
- **조사대상 : 전국 농어촌 4,000가구 내 가구주 또는 배우자**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측정산식 : Σ[(농촌생활 만족도-1) × 25] ÷ 응답자 수**
- **통계공표 : 조사 익년**

☞ 조사결과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5년 주기, 제5차 기본계획 : '25~'29) 수립의 기초자료임

* (법적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조사체계 : 5년 1주기
- 1년차 종합조사와 2~5년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구분	조사부문		조사년도		조사대상
			'18 ~ '22	'23~'27	
종합조사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가구원 정보 및 생활 전반 (공통조사 항목)	2018	2023	농어촌 2,800, 도시 1,200가구
부문별 조사	경제활동, 문화.여가		2019	2024	농어촌 4,000가구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활동, 교육		2020	2025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2021	2026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2022	2027	

□ '24년 측정결과

○ 농어촌 주민들이 인식하는 전반적 **'농촌생활 만족도'**는 **56.3점**[*]으로 '15년(48.9점)보다 7.4점 높아 점진적인 개선 추세에 있음

* 조사대상인 농어촌 지역 4천 가구 중 3,988가구 응답(응답률 99.7%)

-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 항목에서 상대적 만족도가 높고, '교육여건, 문화·여가 여건'은 낮은 수준

* 환경·경관(67.1), 안전(65.2), 이웃관계(63.7), 교육여건(47.3), 문화·여가여건(46.9)

○ 제4차('20~'24)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월 수립)을 중심으로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삶의 질 수준 개선 도모

- 제3차 기본계획 대비 4.6조원 증가한 51.1조원을 투자하여, 각종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새로운 정책수요 대응

- 농어촌 영향평가 추진(2개 완료, 2개 신규)하고,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사업을 선정(4건 신규)하여 삶의 질 정책 실효성 제고

< 농어촌 생활 부문별 만족도 >

(단위 : 점)

연도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여가	기초 생활여건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종합 만족도
'24년*	51.4	53.7	47.3	46.9	53.6	67.1	51.8	56.3
'15년*	44.7 (1개 항목으로 조사)		43.4	38.9	47.5	63.5	42.9	48.9

* 기준 : 조사결과 발표연도 기준(실제 조사연도는 발표연도 –1)

□ 성과분석

◈ **생활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농촌 맞춤형 복지·사회서비스 제공,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지원** 등을 통해 **농촌생활 만족도 향상**

* 종합만족도 : ('15년) 48.9점 → ('24년) 56.3점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을 통한 **농촌정책의 틀 전환**과 **농촌지역 주거여건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조성**

- **정부**는 **국가 기본방침**으로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 **시·군**이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마련**

- 농촌공간계획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난개발 시설**(공장, 축사 등) **이전·철거**와 **공간 재생**(마을공원 등) 지원 강화
  *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지구(누계): ('22) 37개소 → ('23) 68 → ('24) 92

- **농촌지역 복합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주민과의 격차 완화**
  * 농촌형 복합 생활 서비스 시설(누계): ('22) 797개소 → ('23) 930 → ('24) 1,043

- **복합 생활 서비스 거점**을 현장 수요에 맞게 **복합화·단지화**로 **조성**하여 **문화·복지·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
  * 복합화공공행정+문화복지+편의기능 등을 집적/ 단지화서비스+타부처 사업 연계로 거점 조성

- 지역주민의 **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읍·면 중심지와 배후 마을 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배후마을 전달체계 발굴·확대**
  *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발굴·육성 등

-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재산세 경감), **이행수단**(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및 **민-관 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

- 노후·불량 주택 정비 및 상·하수도 보급 등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 취약계층 주거개선(누계): ('22) 7,032가구 → ('23) 7,607 → ('24) 8,177

○ **(사회안전망 및 삶의 질)**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의료 등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농촌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 등의 **자발적·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하위법령 제정·시행**(8.17.)
  * (주요 내용)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기준, 활성화 계획, 지원체계 구축 등

-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등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개선** 등 **지원**
  * 농촌돌봄농장/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22) 83/22개소 → ('23) 92/30 → ('24) 97/33

-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고령농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 건강보험료 지원세대(실적): ('23) 356천세대 → ('24) 368
  ** 연금보험료 지원기한(~'24년) 도래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31년으로 7년 연장)

-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도입·운영으로 농촌주민 9만1천명 지원

  ** 농촌마을 대표자, 농업인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1천여 명 실시

- **여성농업인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농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 농촌아이돌봄 72개소, 찾아가는 돌봄교실 14개소, 농번기돌봄지원 100개소 운영

-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농약 중독·근골격계·폐질환 등 **농작업성 질환 조기 검진** 및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시행**

  * '23년 18개 시·군, 9천명 → '24년 50개 시·군, 3만명

○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유도** 및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힐링·체험·로컬 등 **관광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농촌관광 활성화**

- 농업과 2·3차 산업을 결합하고자 하는 농가 대상 컨설팅·자금 등 초기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요처 발굴로 판로 확보 지원

  *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22.9월) 1,626건 → ('23.9월) 1,786 → ('24.9월) 2,251

-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유망업체(엑셀러레이터 활용) 발굴과 기존 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기업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 각종 홍보 기회 제공

-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민박 제도 개선, 빈집 활용 숙박업, 농촌형 워케이션* 등을 통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

  * 홍천(관광농원)·강릉(민박), 남원(6차산업)·정읍(체험휴양마을), 상주·영천(지자체)

○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민·관 협업**을 통해 **제도·인프라 확충**

- 「개식용종식법」('24.2월 제정)에 따른 **제도 정비, 지원방안 수립**(기본계획 발표, 9월) 등 **정책 실행 기반 마련**

  *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8월),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개정(2월, 4월) 등 하위법령 정비

- 맹견사육허가 시행('24.4월~, 계도기간 1년 운영)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8월, 41개소) **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 운영(6~10월)

- 동물병원의 **진료절차 표준화*** 및 **게시의무 진료비용 항목 확대****

  * ('24.4월) 20종 고시 → ('24.11월) 40종 고시(누계 60종) → ('25.上) 40종 고시(누계 100종)

  ** (기존) 입원·상담비 등 11종 → (확대) CT·MRI 등 20종(제도개선: '24.9월, 시행: '25.1월~)

□ 향후 추진계획

○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본격 추진과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

- 각 지자체(139개 농촌 시·군)에서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경관 등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계획을 주민 등과 함께 본격 수립

  *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25, 도별 1개소)

-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산업시설 등 재배치·집적화, 정주여건 개선, 기업 유치 등 농촌경제 활성화 유도 위한 '25년 신규사업* 추진

  * 농촌특화지구 육성지원 : 지구당 평균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소요

- 문화·복지 등 **복합 서비스 거점**을 **조성**('23: 930개소 → '24: 1,043)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확대**

  *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해 매년 생활SOC 시설 100여 개소 조성 추진

- 농촌 취약마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주택 개량 등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쾌적한 농산어촌 주거환경 조성**

  * '33년까지 주거 취약지역의 62% 해소 전망(매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약 100개소 추진)

○ **농촌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돌봄농장**(97개소) 및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40개소) 등 육성

- **농업인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등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준소득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인상 : ('23~'25) 103(46,350) → ('26안) 109(49,050)

-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왕진버스' 사업 확대

  * ('24) 32억원, 91천명 지원 → ('25) 40억원, 15만명 지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 확대**('22: 9천명 →'27: 15천), **농촌아이돌봄지원** 등 농촌 보육·보건여건 개선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25년) 농촌아이돌봄지원 102개, 농번기돌봄지원 134개, 찾아가는 돌봄교실 14개 지원

○ 농촌 내 **소득 활동**을 **다양화**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하여 **고용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에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추가***하고, **지역산 사용 요건**(주원료 50% 이상 지역산(시도) 사용) **완화**

  * (현행) 농산물에 기반한 제조·가공·체험 → (개선) 농산물을 활용하지 않아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시 농촌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 부여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 네트워킹, 사업화 자금 지원**

- **워케이션 인프라 확대**,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대중교통 할인지원(농촌 투어패스), **농촌 일손여행**('25년 신규)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현장 관리**, 동물의료·펫푸드 등 **연관산업 육성**

-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업계의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 병행**, **'공감 포럼'** 운영 등 **공감대** 확산

-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현행) 반려견 → ('25) 동물생산업장 부모견 및 특수목적견 → ('26) 모든 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품질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해외 진출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등